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2023. 8. 30.

관계부처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요 약 본

I . 추진 배경 : 왜 「스타트업 코리아」 인지?

※ 「스타트업 코리아」란? :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는 나라

- 국내·외 경제는 물가 인상 압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내수·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
 - * 경제전망(OECD 23.6, '22 → '23) : (세계) 3.3 → 2.7, (미국) 2.1 → 1.6, (유럽) 3.5 → 0.9
- 특히,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생산성 제고 요구가 증대
 - * 합계출산율 : ('12) 1.30 → ('14) 1.21 → ('18) 0.98 → ('22) 0.78
-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추세
 - * 테슬라(美) : 자동차 + IT + 자율주행, 루닛(韓) : 의료 + AI 등
- 스마트폰의 보급 및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전세계 상품이 국경없이 경쟁하는 디지털 대항해시대가 도래
- 세계 창업강국들은 자국의 벤처·스타트업을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혁신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 제시
 - 강대국들은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는 창업·벤처 기업을 위해 R&D, 투자(펀드), 규제완화 등 종합지원 정책*을 추진
 - * (美) American Job Plan('21), (英) Future Fund Breakthrough('21), (日) 스타트업육성 5개년 계획('22) 등
 - 특히, 영국(GEP)·UAE(Hub71)·에스토니아(E-residency) 등도 외국인 창업자의 자국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용 중
-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였으나, 디지털 경제에서 벤처·스타트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성장동력의 패러다임이 전환
 - * '21 대비 '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증가율 : 벤처·창업기업이 일반기업 대비 3배 이상 (벤처투자기업 +29.8% > 유니콘기업 +22.9% > 벤처·스타트업+8.1% > 전체 +2.4%)

II. 2023년 정책환경 점검

1. 정책환경 점검

-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 규모와 신설법인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질적 고도화 필요
 - * 벤처투자 : ('06) 0.7조원 → ('21~'22 평균) 약 14.2조원 수준 (약 20배 수준)
신설법인 : ('06) 5만개 → ('21~'22 평균) 약 12만개 수준 (약 2.4배 수준)
- 최근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벤처투자*는 다소 위축, 특히 최근 2년간('21~'22)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 편중**도 심화
 - * 韓 벤처투자액(조원) : ('19) 7.5 → ('20) 8.1 → ('21) 15.9 → ('22) 12.5 → ('23.上) 4.4
 - ** 창업투자회사 등의 '21~'22년 투자액(14.4조원)은 통상적 수준(8.6조원)보다 5.8조원 늘었으며, 그 중 81%인 4.8조원이 비대면·바이오 관련 업종에 투자
- 국내 유니콘 기업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딥테크 기업의 비중이 낮음**
 - * 중기부가 파악한 유니콘 기업 23개사 중 아이지에이웍스(빅데이터), 메가존 및 NHN클라우드(클라우드), 파두(시스템반도체) 4개사에 불과('23.上 기준)
 - **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에 따르면 '23년 기준 창업환경 상위 30개 전세계 도시권 중 한국은 1개(서울) 뿐 (美 : 13개)
- 그간의 창업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제기
 -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함에 따라 글로벌 환경에 적응이 느리고 글로벌 경쟁력 부족
 - TIPS처럼 투자+R&D 등이 결합된 우수한 정책도 추진되었으나, 오랫동안 보조, 출연 중심의 단순 지원으로 성장의 동기가 부족
 - 수도권-비수도권의 생태계 양극화가 줄어들지 않고, 창업·벤처투자 정책이 지역주력산업과 연계되지 못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반감
 - 기술기반 기업들에게는 기업간 밸류체인과 융복합이 중요하나, 개별 스타트업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개방형 혁신이 미흡

□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격차(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유의미한 정책 초석을 마련

대 책	주요 과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22.9)	·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및 해외 거점 확대 · 해외 인재·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22.10)	· 5년간 초격차에 도전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 사업화·R&D 등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를 집중 지원(5년간 민·관 공동으로 2조원)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22.11)	·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모펀드 조성 및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 투자시장 선진화를 위한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23.4)	· 10.5조원의 추가 자금 지원 방안 발표 ·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23.5)	·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 실증환경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및 해외인증 지원

○ 다만, 보완되어야 할 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창업지원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

2.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창업지원정책 방향

- ◆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
- ◆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고, 관계부처가 원팀(One-Team)이 되어, 외국인·유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6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분야	AS-IS	TO-BE
① 정책 대상	· 국내 지원에 한정	· 해외에서의 창업까지 포함
② 자금 지원방식	· 보조·출연금 등 단순 방식	· 투자, 융자 등 융·복합 방식 도입
③ 개방성	· 개별 기업에 대한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지원	· 대기업 협업, 클러스터 등 개방형 혁신 전략 추진
④ 지원 주체	· 정부가 하향식으로 주도	· 민관 협업에 의한 수평적 추진
⑤ 지역 정책	· 지역산업과 무관한 기업지원	· 지역산업과 연계한 창업기업 육성
⑥ 정책 공간	· 물리적 공간에 초점	· 외연을 가상공간까지 확대

Ⅲ. 정책방향 및 핵심전략

비전

「**스타트업 코리아**」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

핵심 목표

- 글로벌 100대 유니콘 : (22) 1개 → (27) 5개
-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 : (22) 서울10위 → (27) 서울7위
- 벤처투자 규모 : (22) 12.5조원 → (27) 14.2조원
- 지역기반 기술창업 비율 : (22) 37.4% → (27) 40%
- 지주회사 CVC 신규투자액 : (22) 2,118억원 → (27) 5,000억원
-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 : (22) 6위 → (27) 3위

전략 1. 과감한 **글로벌 도전**^{아웃바운드}과 **글로벌 창업허브**^{인바운드} 조성

〈아웃바운드〉

- ① 쉬운 해외창업 및 해외에서 성장지원
- ② 글로벌 정책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

〈인바운드〉

- ③ 외국인 창·취업 지원
- ④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창업환경 조성

전략 2.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및 새로운 창업지원방식의 도입

- ①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 ② 융복합형 창업지원 방식 도입
- ③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체계 마련

전략 3.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 ①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 ② 지역기반 경쟁력 갖춘 스타트업 양성
- ③ 지역기반 벤처투자 활성화

전략 4.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 ① 스타트업-대기업간 개방형 혁신 촉진
- ② M&A 및 CVC 제도개선 등
- ③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 도입

전략 5.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 조성

- ① 도전적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
- ② 창업으로 연결되는 군복무 제도 및 대학·연구 환경
- ③ 재창업과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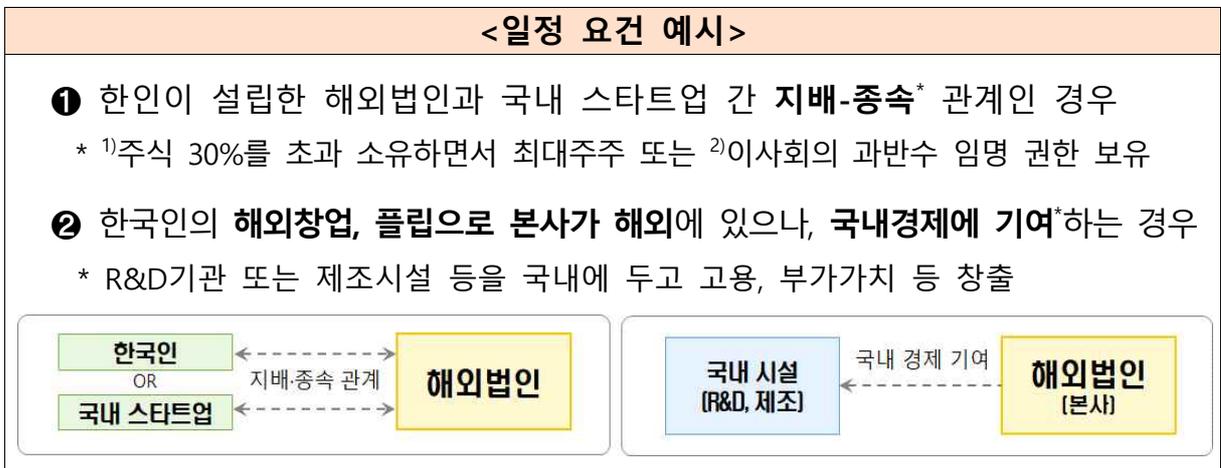
IV. 세부 추진과제

1 과감한 글로벌 도전^{아웃바운드}과 글로벌 창업허브^{인바운드} 조성

- ※ 아웃바운드(Out-Bound) :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 ※ 인바운드(In-Bound) : 해외 스타트업의 한국 창업생태계 안착 및 적응 지원 정책

① 쉬운 해외창업 및 해외에서의 성장 지원^{아웃바운드}

- 한국인이 창업한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 마련 등 성공적인 해외정착 지원



- 해외의 VC로부터 일정금액 이상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 ('24, 20개사)

* 글로벌 인큐베이팅 및 멘토링을 통해서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 타겟팅 추진

- 글로벌 펀드 확대(~'24. 10조원) 및 해외진출 전용펀드 신규 조성

< 해외진출 전용펀드 투자 대상(안) >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주요 출자 분야
1)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2)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3) 해외M&A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4) 국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한국인 출신 창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 등. 단, 이 경우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투자 가능

- KVIC 실리콘밸리 사무소와 연계하여 해외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미국·중동·일본 등 대륙별 특성에 맞는 스타트업 진출전략 수립

* (미국) 한-미 클러스터 기관 간 협력 강화, 북미지역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
 (중동) 스타트업 행사간 파트너십 구축, 국가 간 공동펀드 조성 등
 (일본) 재외공관 기반 네트워킹 형성, 양국간 정책 교류, 한류 행사 연계 등

②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아웃바운드}

- 기 지원받은 기업 中 해외진출 가능성 높은 기업 Pool 구축 및 연계사업 우선 선정* 등으로 지원 효율성과 해외 성공가능성 제고

* (예시) 초격차 1000+ 스타트업 선정 → 해외 전시회 우선 참가 지원

- 중진공 직영 청창사(5개)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청창사로 전환 검토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등 해외진출 발판 확대

* (예시) VIVATECH(프랑스), SWITCH(싱가폴), CES & TECHCRUNCH(미국), SLUSH(핀란드)

- 부처별로 산재*한 기업해외DB를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PMS)에 연계한 「스타트업 통합DB」를 구축, 해외진출 지원사업 효율화

* (산업부) 외국인 직접투자, 서비스 수출 (관세청) 수출신고내역 (관계부처) 외국인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분야*별 전문화된 해외진출 촉진

* 콘텐츠(문체부), 데이터(과기정통부), 푸드테크(농식품부), 에듀테크(교육부) 등 범부처 합동

- 부처 협업* 기반의 분야별 벤처·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면서도, 공공구매를 통해 창업기업 제품 대상 해외 실증 및 판로개척 지원

* '23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특화분야 : 스포츠헬스케어(문체부), 스마트시티 및 물류(국토부), 푸드·에그테크(농식품부) 등

③ 외국인의 창·취업 지원^{인바운드}

- 우수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창업하고 취업하기 용이하도록 외국인 창업·취업비자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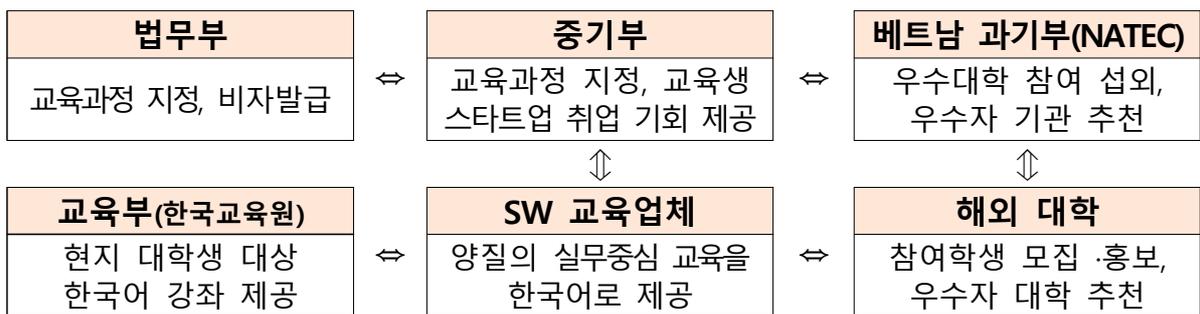
- **(창업비자^{D-8})** 기술성·사업성에 기반한 창업비자 부여 및 기술창업비자 연장시 매출 요건 외 **종합적***으로 고려 (세부 기준 마련)
 - * 초기창업기업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 → 매출 발생에 애로
- **(학생비자^{D-2})**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방학 중 국내 창업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범위 확대***
 - * 현재는 제한적인 경제활동만 가능 (과학기술분야 학생연구원, 아르바이트 등)
- **(취업비자^{E-7})** 역량검증*을 통한 **비자발급 요건 완화** 추진
 - * 도입업종(안)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법무장관이 정하는 분야, 중기장관이 추천 / (예시) 학사+1년 이상 경력 → 학사 졸업자

□ 국내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K-스카우터 프로젝트」 도입 (영국 GEP* 벤치마킹)

* 역량을 보유한 해외 창업기업의 **영국 본사 이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 유치 전략가인 **딜메이커**를 통해 비자·멘토링·네트워킹 등 **종합 지원**

□ 개도국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SW분야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 스타트업으로 취업 연계하는 「K-Tech College」 추진

국내 스타트업 SW분야 인력양성·공급



- 외국인 창업 촉진 위해 **전용 창업경진대회(K-그랜드 챌린지)** 입상자 사업화 지원, 「도전 K-스타트업」 現 학생리그에 유학생 트랙 신설 추진
-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 및 스타트업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를 신설

4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창업 및 지원환경 조성^{인바운드}

-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 「스페이스 K」 구축 (수도권)
 -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VC 등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허브 조성
- 가상공간에서의 기업활동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상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 시범 추진
 - * K-startup과 Metavers(Meta+universe)의 합성어로서 스타트업의 가상공간이란 의미
 - 국내 창업 희망 외국인이 가상공간에서 창업·경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2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및 새로운 창업지원방식 도입

1 벤처투자의 민간 전환 촉진

-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27, 2조원)
 - 3대 핵심 출자분야(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 중심으로 조성
 - 금융권, 벤처기업, 연기금 등 다양한 후보군들의 민간 출자를 유도*
 - *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검토
- 안정적인 모태펀드 정부예산 공급을 통한 벤처펀드 생태계 조성*
 - * 연평균 8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27년까지)
- 국책은행의 선도적 벤처투자 역할 강화 및 민간은행 출자 유도를 위한 출자한도 상향 및 민간 모펀드 세액공제 추진
 - 은행의 벤처펀드(벤처조합, 신기조합)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現 0.5%)로 2배 확대하고, 민간모펀드 출자 세액공제 추진
 - 정부(0.3조원), 민간(2.1조원), 산업은행(0.6조원) 매칭 출자를 통한 혁신성장펀드(분야 : 혁신산업, 성장지원) 3조원 조성 ('23.4~)

② 융복합형 창업지원 방식 도입

□ 정부의 추가 재정없이도 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창업사업 지원방식을 다각화

- 단순 출연·보조 지원방식 외에도 성공불, 보조+투자, 보조+융자 등 융·복합형* 방식을 추가하고, 기업 성장시 지원금의 일부를 상환·반납

* 예시(보조+투자시) : (현행) 보조금 1억원 → (개선) 보조 1억원 + 투자 1억원
→ 기업이 상승된 가치로 후속투자를 받을 경우 정부는 1억원 이상을 회수하거나, 창업자가 콜옵션을 부여하여 정부는 적정 시장가격에 매각

※ '24년에 「창업도약패키지」부터 시범적용하고, 만족도·성과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

※ **이스라엘**은 성공시 매년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상환받는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정부지원금의 전액을 상환할때까지 로열티 지불

③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마련

※ 기업가형 소상공인 :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제조기반, 서비스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활혁신형 소상공인

□ 수익 창출용 자산(부동산·제품·서비스 등)에 투자*하고, 창출된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 (「소상공인법」 개정)

* 개인·법인사업자의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

** 지분전환계약 제도와 병행 운영

□ 민간투자자가 창의적 소상공인에 先투자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 신설

3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안

① 지역창업의 혁신을 위한 기반,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 「스타트업 클러스터」 : 창업자, 대학, 앵커기업 및 지원기관 등 다양한 혁신주체의 물리적 집적을 통해 지역 내 창업 역량을 결집,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창업생태계

- 지역도심 내 핵심권역을 창업기업 특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재구축
 - 정주여건과 창업기반 등을 갖추었거나 기획 예정인 비수도권에 (가칭) 「지방 스페이스-K」를 조성하고 지역창업 클러스터로서 육성
 - ※ 2개 이상 창업지원기능(BI·중장년·1인창조·메이커스페이스 등)과 VC 등이 집적한 “(가칭) 「K-창업캠퍼스」” 도 시범적으로 도입
 - 지자체가 각종 발전계획 수립 시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민간주도 전담기관 설립, 지역 내 창업보육 우수인력 양성

② 지역기반의 경쟁력 갖춘 스타트업 양성

-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시에는 우선적으로 지원
- 지역 소재 스타트업과 산업별 특화 인프라 연계 강화
 - 지역 주력산업과 연결하여 지역 소재 기업의 성장 촉진

③ 지역기반 벤처투자 활성화

- 지역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지원 목적의 전용 펀드*(재간접펀드) 조성, 지역 엔젤투자허브 확대 (‘23년 3개소 →’27년까지 5개소 조성 목표)
 - * 엔젤투자자가 지역기업 투자 목적으로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재출자
-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6, 1조원)
- 정책금융기관(기보)의 비수도권 대상 보증투자 확대

4

딥테크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1 스타트업-대기업간 개방형 혁신 촉진

- 우수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들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수요(needs)에 부합하는 기업을 쌍방향 탐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 플랫폼 내 AI 분석을 통해 협업 수요를 맞춤형으로 매칭하고, 정부는 실증(PoC), 시제품(Prototype), 최소요건제품(MVP) 제작 등을 지원

- 「**팹리스 챌린지***」와 같은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을 AI·미래모빌리티 등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 추진

*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파운드리 공정 이용과 설계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민간의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기업은 우대하고, 대기업과 협업하여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지원

- 딥테크 동종·이종간 기술교류·네트워킹 및 BM 개발지원

※ (예시) 신시장 창출을 위한 수요 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 시스템반도체 ↔ 타 기술 교류를 통한 협업(예시) >

시스템반도체	타 기술	협업 예시
시스템반도체 창업기업	↔ 바이오헬스	·랩온어칩 반도체 기업과 DNA 치료제 등 신약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공동 실증
	↔ 미래모빌리티	·라이다 센서 반도체 기업과 자율주행 SW 기업 협업형 자율주행 통합 솔루션 개발
	↔ 친환경·에너지	·전력센서 반도체 기업과 에너지 효율화 기업간 협업을 통한 O&M 솔루션 개발
	↔ 로봇	·배송 로봇 기업과 자율주행 SW 개발 기업 협업을 통한 문 앞 배송하는 물류 로봇 개발

2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M&A 및 CVC 제도개선 등

-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종합 플랫폼 구축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개편, ~'23년말)

* AI를 활용한 매도·매수 기업 간 온라인매칭 및 벤처기업 인수 시 소요자금 지원 (최대 200억원)

○ 개방형 혁신 뒷받침을 위한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인수시 해당 기술 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현행) 기술가치금액 =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의 130%
→ (개선) 기술가치금액 =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의 120%

□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한 CVC 생태계 활성화

- * 국내 창업기업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한 해외법인의 경우,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현 해외투자 비율은 20%로 제한)

○ GCV 글로벌 서밋* 등 국제 컨퍼런스를 국내 CVC, VC협회 등과 함께 국내에서 개최하여 글로벌 협력을 지원

- * GCV(Global Corporate Venturing) : 매년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개최되며,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 정보, 네트워킹 기회 등 교류·협력

□ 기술특례상장 개선*을 통한 벤처기업 회수시장 활성화

- * 5년간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첨단기술기업 대상 기술평가 완화(2개→1개 기관),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지만 우수 첨단기술을 가진 경우 특례상장 허용

③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 도입

□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인 글로벌 혁신 특구 도입 (하반기 지정)

○ 규제특례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실증·인증 체계** 구축 및 스케일업 지원

- * 명시적인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은 원칙적 허용
** 해외 실증거점 조성, UL·CE 인증기관 참여 글로벌 인증센터 구축 등

□ '창업규제트리*' 및 '규제유예제**'를 통해 창업기업의 규제 정보 파악을 통한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 창업규제트리 : 스타트업이 분야별로 핵심규제 정보를 파악하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규제정보 진단 체계로 BM 전환 등 지원
** 규제유예제 : 초기창업기업 대상으로 창업 이후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한시적 적용유예

① 도전적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

- '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고, 인정 교과목으로도 반영 추진 (교육청 협의)
- 대학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추진
 - * 대학이 대상인 창업사업의 기관 공모시, 제도의 운영여부·실적 등 평가 반영

② 창업으로 연결되는 군복무 제도 및 대학·연구 환경

- 「과학기술전문사관」의 기존 학사 트랙 외에 석사 트랙 신규 도입 및 선발인원 확대* 추진, 창업사업화·교육과 연계 강화
 - * 학부생(대학교 2~3학년)을 선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복무
- 교수·연구원들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벤처기업을 경험하고 분사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휴·겸직 제도 확대*
 - *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원, 국·공립 기관의 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까지 포함 → (개선) 모든 대학 및 연구원
-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스톡옵션 강화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제도 보완
 - * 성과조건부 주식 : 성과달성시 보상으로 주식을 제공, 벤처기업에 한해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
- 「벤처확인제도」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로 개편

③ 재창업과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 구축

- 재도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재도약패키지, 재도전자금 및 재도약펀드 등 재도전 지원들을 확대 또는 강화하고,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범위 확대 (2→3개 분야)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본 문

순서

I . 추진배경 : 왜 「스타트업 코리아」 인지?	1
II . 2023년 정책환경 점검	6
1. 정책환경 점검	6
2.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창업지원정책 방향	12
III . 정책방향 및 핵심전략	14
IV . 세부 추진과제	15
1. 글로벌 도전 ^{아웃바운드} 과 글로벌 창업허브 ^{인바운드} 조성	15
2.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및 새로운 창업지원방식 도입	25
3.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벤처투자 환경 보완	30
4. 딥테크 육성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35
5.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 조성	41
V . 향후 추진일정	45

I. 추진 배경 : 왜 「스타트업 코리아」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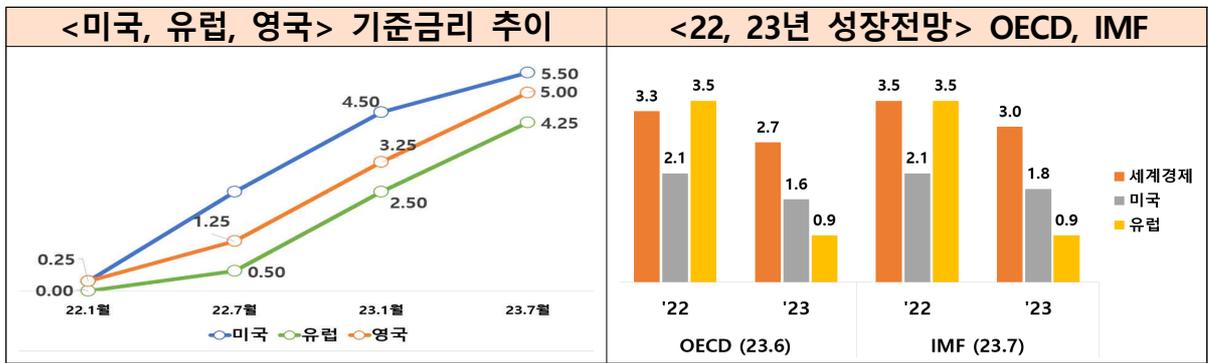
※ 「스타트업 코리아」란? :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는 나라

1 대·내외 경제 현황 : 경기 침체 지속, 저성장 진입

□ 세계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인상 압력*이 크게 증대

* 미국 CPI(전년동기) : ('22.12) +5.7% → ('23.2) +6% → ('23.5) +4.0% → ('23.7) +3.2%

○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통화긴축 강화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으로 내수 및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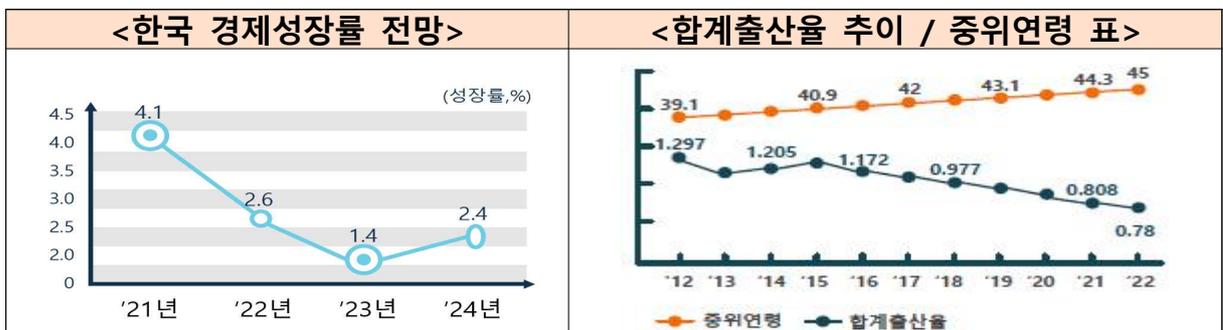


□ 우리나라도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아 물가·금리가 상승*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

* 소비자물가지수(한은) : ('21.4Q) 103.75 → ('22.4Q) 109.2 → ('23.5) 110.1 → ('23.7) 111.2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1) 1.25 → ('22.7) 2.25 → ('22.12) 3.25 → ('23.2) 3.50

○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속도는 비교대상 33개국 중 30위(한국경제연구원, 20)



② 전세계 경제 트렌드 : 디지털·융복합·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비대면화가 가속되고 디지털 전환* 현상이 가속화

* 온라인 선호 등 소비문화 전환, 재택근무를 통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이 활성화되며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방식의 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



- 스마트폰의 보급 및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전세계 상품이 국경없이 경쟁하는 디지털 대항해시대가 도래

- 구글·애플 등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도 증대

* '25년 플랫폼 기업 매출액이 약 60조\$로 전체 글로벌 기업 매출액의 30% 수준, 향후 10년간 신규 비즈니스의 70% 이상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출(WEF,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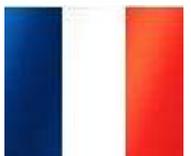
-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인 벤처·스타트업들이 디지털·글로벌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사례 다수 발생

<벤처·스타트업의 환경 적응 사례>

기업	특징
쿠팡 coupang	■ '10년 소셜 커머스에서 출발, '14년 전자상거래 업체로 전환 시작 배달서비스(쿠팡이츠), 택배(쿠팡로지스틱스), OTT(쿠팡플레이) 등 공격적 투자를 통한 종합 플랫폼 구축 * ('14.5월) 유니콘 기업 등재, ('21.3월) 미국 뉴욕 증시 상장
크래프톤 KRAFTON	■ '07년 게임 제작사로 설립, '배틀그라운드 게임('17년)의 세계적 흥행을 토대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소셜 플랫폼, 오디오 플랫폼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 영역 진출 * ('18.8월) 유니콘 기업 등재, ('21.8월) 코스피 상장

3 세계 창업강국들은 자국의 벤처·스타트업을 총력 지원과 함께 해외 혁신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 제시

- 미국, 중국 등 세계 창업강국들은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는 창업·벤처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
 - 연구개발, 펀드 조성, 규제완화, 인력 유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중

국 가	주요 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erican Job Plan(21) : 국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직업교육, 제조 스타트업 등에 총 5,800억달러 규모 투입 ■ American AI Initiative(19) : 국가의 혁신성장동력으로서 AI 산업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연구개발 지원, 데이터법 시행, 규제완화 등 추진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차 5개년 계획(21) : 5대 발전이념(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에 기반하여 과학기술 혁신, 산업발전, 디지털 전환을 통합 추진하고, 중·저소득층의 소득 제고를 위해 쌍창(창업과 혁신)을 통한 기업가정신 제고 ■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추진 5대 방안(19) : 국민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활성화, 과학기술혁신, 대·중소기업 상생 등 지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ture Fund Breakthrough(21) : 획기적인 기술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R&D 집약 영국기업에 정부와 민간부문 투자자가 3억 7,500만 파운드 공동 투자 * (기술분야) ①양자 컴퓨팅, ②클린테크, ③생명과학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ghtech Strategie 2025(21) : 범부처 산업진흥정책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추진 ■ 2030 Vision for Industry 4.0(19) :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및 4차 산업 선도를 위해 ①주권의 자율성, ②상호운용성, ③지속가능성에 기반한 발전전략 수립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nch Tech Sovereignty fund(21) : 공공투자은행이 운용하는 딥테크 전문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투자 견인을 통한 산업 육성 ■ Deep Tech Plan(19) : 파괴적 혁신 분야에서 프랑스를 중심 국가로 육성, 딥테크 기업에 대해 5개년에 걸쳐 25억 유로 규모의 집중 지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22) : 新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성장전략을 '과학기술·혁신'으로 규정하고, ①스타트업 인재·네트워크 구축, ②스타트업 자금공급 강화 및 출구전략 다변화, ③오픈이노베이션 등 3대 핵심과제 추진 ■ 코로나 극복·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21) : 첨단과학기술, 청정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지원 등 정책과제 제시 & 55.7조엔 투입

- 실리콘밸리*(미국), Station-F**(프랑스)과 같은 창업허브는 자국민뿐만 아닌 타국의 우수 자본·인재들을 창업 생태계로 유입·흡수

* (샌드버드) 한국계 CEO인 김동신씨가 창업, 캘리포니아로 본사를 이전하여 현지 AC-VC로부터 보육 및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에 등극

** (파운더스 프로그램) : 국적에 상관 없이 전 세계 창업자에게 보육 서비스 제공

- 영국·네덜란드 등도 외국인 창업자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용

국 가	주요 정책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P(Global Entrepreneur Programme) : 글로벌 기술 기업의 영국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GEP의 해외 스타트업 유치 전략가인 「딜메이커」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의 비자 승인, 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 (효과) 영국으로 1,000개 이상의 기업 이전, 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1.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함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부다비 국영 액셀러레이터 Hub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 최대 1년간 현지 거주지와 사무실을 제공하고, VC-기업 파트너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 - 벤처랩 : 자금(약 5억원), 업계 전문가 등의 멘토링·컨설팅 등을 제공 - 연계 프로그램 : 스타트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 등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tch Residence permit : 우수 인재를 위한 「스타트업 비자」 트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1년) 창업비자 → (추가2년) 자영업비자 → (5년경과시) 영주권 연계 - 세제 : 고급인력 인정받을시, 체류기간 5년간 세금 30% 이상 감면 - 멘토링 : 비자에 대해 전담 멘토(퍼실리레이터) 지원 ※ (체류 허가 건수) '20. 1.38만 → '22 3.08만명(2년간 +123%)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esidency(전자 거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외국인이 물리적 이동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거주증을 신청·발급 받을수 있는 제도 * 주로 창업가, 디지털 노마드가 발급받고, 발급자의 90%가 청년 - (효과) '23년 현재 거주증 10만명, 사업체 2.5만개 등 성공적 안착 * 에스토니아 정부 입장에서 1) 추가 세수확보, 2) 투자·고용 창출 3)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4) 첨단국가로의 이미지 개선 등 효과 발생

4 성장동력 패러다임의 전환 :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 디지털 경제에서 벤처·스타트업 역할 증대

- 과거 대한민국은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대기업 주도성장 모델을 통하여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빠르게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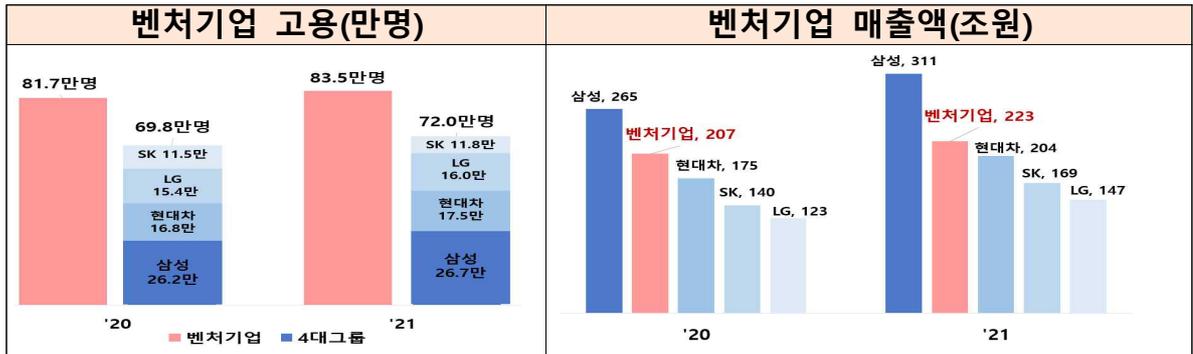
- 그러나, 글로벌 저성장의 지속과 융복합·혁신성이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존의 성장방식은 한계에 직면

□ 80·90년대는 창업기업에 대해 대기업의 제조 부품 공급사라는 종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나,

- 현재 벤처·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신진대사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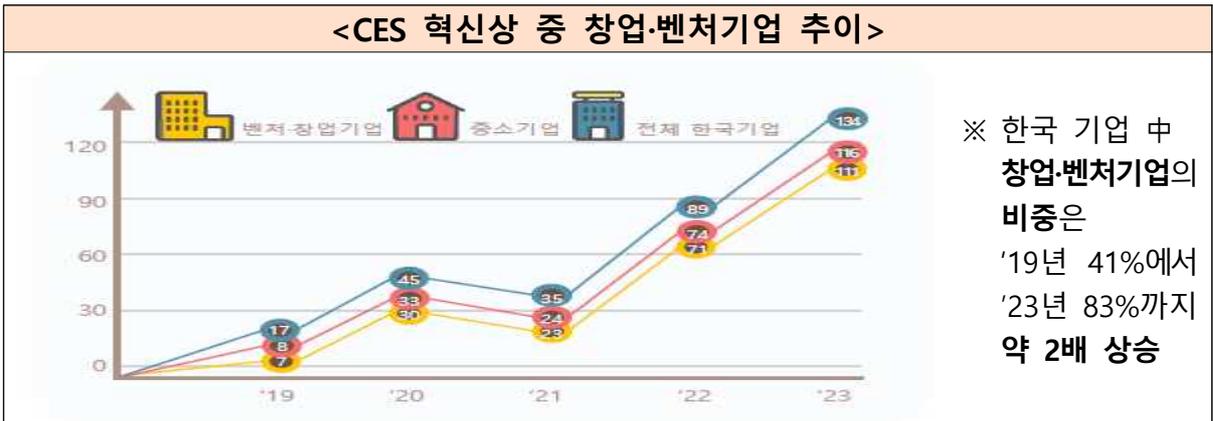
* (파두) 반도체 설계(팹리스), (아이지에이웍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벤처기업이 창출하는 고용과 매출액>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21년 대비 '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증가율) : 벤처·창업기업이 일반기업 대비 3배 이상
 피투자기업(+29.8%) > 유니콘기업(+22.9%) > 벤처·스타트업(+8.1%) > 전체(+2.4%)

-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상은 과거 대기업의 무대였으나, 최근에는 국내 수상제품의 절반 이상을 벤처·창업기업이 차지



- ◆ 전세계 경제는 대·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유연·탄력적인 스타트업에게 유리한 디지털·글로벌 경제로 전환
- ◆ 한편, 주요 국가들은 스타트업 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중
- ◆ 한국도 젊은 세대들이 창업과 글로벌 진출에 도전하도록 유도하고, 해외의 인재·자금이 한국 창업생태계에 유입되도록 고민 필요

II. 2023년 정책환경 점검

1. 정책환경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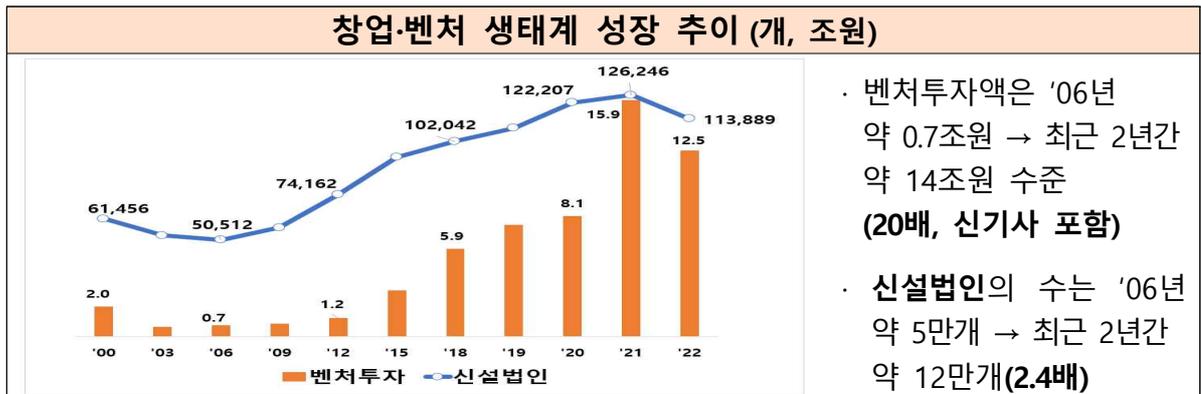
① 창업·벤처 생태계의 양적인 성장은 어느정도 달성, 질적 고도화 필요

- 한국 정부는 그간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예산 확대, 정책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

<지난 정부들의 창업·벤처 생태계 개선 노력>

관련 정부	주요 내용
노무현(03-08)	· 모태펀드 신설, 패자부활 프로그램 도입 등
이명박(08-13)	· 창업절차 간소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박근혜(13-17)	· 팁스 도입, 창업교육 확대 내실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신설 등
문재인(17-22)	· 「벤처투자법」 제정, 벤처확인 민간 이양, 「창업지원법」 전면개정 등

-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한국의 벤처투자 규모와 신설법인이 지난 15여년간 각 20배 및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 달성



- 서울은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위로 선정되고 (스타트업 지능, '22) 창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대외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

* 대기업 재직자의 54%, 취업 준비생의 51%가 창업을 생각 중(2022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 그러나, 최근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벤처투자*는 다소 위축, 특히 최근 2년간('21~'22)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 편중**도 심화

* 韓 벤처투자액(조원) : ('19) 7.5 → ('20) 8.1 → ('21) 15.9 → ('22) 12.5 → ('23.上) 4.4

** 창업투자회사 등의 '21~'22년 투자액(14.4조원)은 통상적 수준(8.6조원)보다 5.8조원 늘었으며, 그 중 81%인 4.8조원이 비대면·바이오 관련 업종에 투자

2] 그간의 창업정책의 현황과 제기되는 보완점

1) 제한적인 창업지원 대상과 국내 사업화 중심

- 현 창업정책은 ①한국인이 ②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폐쇄적 정책에 가까우나, 이는 글로벌화와 해외 진출에는 한계*
- 그간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은 네트워킹, 단기 교육 및 체류 등 경험 수준에 불과하고 현지에서의 안착·성장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

<대통령님 말씀>



“시장은 국경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한국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국제화된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산업·기업 정책방향, '22.12.27. >

< 현재 창업지원정책 패러다임 >

구 분		창업 장소	
		한국	해외
창업 주체	한국인	○	△ ¹
	외국인	△ ²	-

⇒ 1) 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국내에의 기여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 지원하여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촉진

현장의 목소리

“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다 PR할 수 있고, 원활한 투자가 가능 ”

< 해외 법인 지원의 필요성 >

- ①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촉진
 -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획득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정보 활용 가능
 - 현지 VC가 해외법인에 투자하면서, 모국에 있는 스타트업에도 투자하는 경향
- ② 국내에서의 세수 확보 및 고용 창출 등 한국 경제에 기여
 - 본사는 외국에 있지만, 국내 사업을 병행하면서 한국 내 매출·고용 증가(미미박스 등)
 - 해외 창업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사업 확장시 본국을 우선 고려(몰로코, 에누마 등)

⇒ 2) 美 실리콘밸리와 같이 우수 인력과 자본을 내부 창업생태계로 유입시키고, 지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순환*** 구조 필요

* 풍부한 투자자본 + 활발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문화 → 우수 인력 유입
→ 기술의 발전과 혁신 → **우수 인력의 재유입**

현장의 목소리

“ 그간 글로벌 창업지원은 아웃바운드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해외 창업자 유치가 어렵고, 국내에 체류하는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 인바운드 측면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

2)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

□ 벤처펀드의 약 2/3가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출자를 받아 결성되는 등 벤처투자 생태계의 **자생적***인 기반이 부족

* 해외 선진국은 정책 모펀드와 민간 모펀드가 함께 민간 자본을 유입

○ 창업사업은 역시 지난 10여년간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으나, 방식 (보조 위주)·거버넌스(정부 주도) 등 **질적 측면**에서는 큰 변화 없이 유지

* 창업지원 예산(중기부, 억원) : ('13) 2,238 → ('18) 6,911 → ('23) 8,834

현장의 목소리

“ 향후 저성장 및 세수 감수 등 고려시, 보조·출연 위주의 지원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려움. 성과가 적립되고 재투자되는 순환 구조도 고민 필요 ”

⇒ 민간 투자역량을 확대하여 민간 자본도 벤처생태계에 유입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게 새로운 지원방식도 검토

3) 수도권-비수도권 간 창업·벤처 생태계의 양극화

□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창업·벤처생태계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며, 지역 산업과 창업정책의 연계성은 미흡

* 기술창업 비수도권 비중(%) : ('17) 41.4 → ('19) 39.8 → ('21) 36.2 → ('22) 37.4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 : ('17) 17.7 → ('19) 20.6 → ('21) 18.2 → ('22) 19.4 ※ 창투사 기준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다양한 지역창업 지원공간을 조성하였으나, 역할은 유사·중복되고 연계도 부족하다는 비판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센터 등이 존재하지만, 각 지원공간의 특성이 불분명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도 부족 ”

○ 벤처투자 생태계가 수도권에 집중, 벤처투자 → 지역기업의 성장 →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의 **순환 구조** 미흡

※ 실제로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서울, 경기, 대전, 부산, 경북 순)은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투자-일자리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20년 기준)

⇒ 지역에서도 자신감 있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그 마중물이 될 지역기반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

4)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보다는 독립적인 성장 지원 및 전략

* 기업들이 내부 자원뿐만 아닌, 외부 아이디어와 연구개발(R&D)를 함께 활용하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개념('03년 버클리大, Henry Chesbrough)

□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융합이 활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개방형 혁신 사례 및 대표 사례>			
 <구글>	스타트업과의 협업, M&A 등을 통해 거대기업 으로 성장 - '05년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 인수 - '14년 알파고 개발한 '딥마인드'를 합병	· 혁신 네트워크	다수 참여자의 의견을 수집·융합
		· 해결책 공모	대중의 집단 지성 활용해 문제 해결
		· M&A	유망기술 가진 기업 인수·합병
		· 공동 연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획득 기술 공유

○ 반면, 국내 대기업은 자체 보유한 역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스타트업과의 M&A 등을 통한 개방형 혁신*에는 소극적

* 내부의 폐쇄적 조직문화, 과거 CVC 운영 불가 등 기업집단에 대한 높은 규제 등 작용

-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 M&A 시장 등은 국내에서의 개방형 혁신을 어렵게 하는 요소

⇒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된 제도·규제들을 개선

5)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사업화가 미흡하고, 재도전하기 어려운 환경

□ 현 창업지원사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지원에 집중

- 그러나, 학생이 일상 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창업하거나, 군인, 직장인이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다수

<p><학생 창업 사례> : 크리에이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중퇴 후, 크리에이터를 위한 광고주 관리 및 분석 SW 기업 설립 	<p><대학 창업 사례> : 클라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공동대표는 선후배 관계로 재학 중 창업원 선생님 소개로 만나, 교육 플랫폼 스타트업 '클라썸' 공동 창업
<p><군복무 창업 사례> : 스타스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복무 중 내무반 동료들과 불가사리를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 및 화장품 원료 개발 	<p><사내 창업 사례> : 웰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재직 중 본인의 의사 경력을 활용하여 건강관리 스타트업을 창업

⇒ 청소년, 청년들 대상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여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 대학·군복무 등 일상의 경험이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창업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

□ 우리나라는 한번의 실패가 영구 퇴출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로, 이로 인해 창업자들의 도전정신이 위축

※ 소멸기업 현황(만개, 통계청) : (17) 69.8 → (18) 69.2 → (19) 73.6 → (20) 76.1

- 그러나, 혁신 창업의 경우 한번에 성공하는 사례가 희귀하고*, 실패를 발판삼아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경우가 다수**

* 실리콘 벨리의 평균 실패 경험 : 2.8회(하버드大), 실패 확률 80%

** (토스 이승건 대표) 소셜미디어, 휴대폰 투표 앱 등 8번의 창업 실패

⇒ 과거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선배 기업의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전수되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

3 윤석열 정부에서의 변화

: 초격차, 글로벌 등 일부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초석을 마련

- 윤석열 정부 들어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대책들을 수립
 -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발표 (‘22.9)
 -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육성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기획 (‘22.10)
 -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본이 유입되도록 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을 확대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수립 (‘22.11)
 -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혁신 벤처 자금대책」을 발표 (‘23.4)
 -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해외실증을 지원 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수립 (‘23.5)

대 책	주요 과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22.9)	·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및 해외 거점 확대 · 해외 인재·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22.10)	· 5년간 초격차에 도전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 사업화·R&D 등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를 집중 지원(5년간 민·관 공동으로 2조원)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22.11)	·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모펀드 조성 및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 투자시장 선진화를 위한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23.4)	· 10.5조원의 추가 자금 지원 방안 발표 ·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23.5)	·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 실증환경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및 해외인증 지원

- 이러한 대책들은 윤석열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지원 방향의 초석을 수립하였다는 의의가 존재
 - 다만, 보완되어야 할 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창업지원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

2.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창업지원정책 방향

- ◆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
- ◆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고, **관계부처가 원팀(One-Team)**이 되어, **외국인·유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 현 시점은 대한민국이 **Fast-follower**에서 **First-mover**로 전환해야 할 골든 타임으로, 중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요구
 -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주체인 **벤처·스타트업**을 **전부처 합동**으로 총력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필요

<대통령님 말씀>



“기업가 정신을 지닌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 피울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IT,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 대통령님 신년사, '23.01.01. >

- 이에, 윤석열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은 **그간의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

<6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분야	AS-IS	TO-BE
① 정책 대상	· 국내 지원에 한정	· 해외에서의 창업까지 포함
② 자금 지원방식	· 보조·출연금 등 단순 방식	· 투자, 융자 등 융·복합 방식 도입
③ 개방성	· 개별 기업에 대한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지원	· 대기업 협업, 클러스터 등 개방형 혁신 전략 추진
④ 지원 주체	· 정부가 하향식으로 주도	· 민관 협업 에 의한 수평적 추진
⑤ 지역 정책	· 지역산업과 무관한 기업지원	· 지역산업과 연계한 창업기업 육성
⑥ 정책 공간	· 물리적 공간에 초점	· 외연을 가상공간까지 확대

< 윤석열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

① **(국내 한정 → 해외 포함)** 내국인의 국내창업에 국한되었던 정책대상을 내국인이 창업한 **해외 현지법인***, **국내 창업 외국인**** 등으로 확장

* 해외 창업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글로벌 팁스 트랙 신설 등

** 외국인 창업·취업 비자 요건 완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구축 등

② **(단순 보조 → 융복합)** 보조금 지원방식을 기업 스스로 투자 유치나 매출 증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투자 등이 결합된 **융복합형**으로 전환

③ **(독립·폐쇄적 → 개방형 혁신)** 특정 기업을 단독으로 지원하기보다 **개방형 혁신**과 **클러스터**를 통한 기업들간의 **협업***을 촉진

*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 CVC 규제개선 및 M&A 지원 등

④ **(정부주도 → 민관협업)**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밀어준다는 원칙*에 의거, **민관 협업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②** :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이 발휘되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복원

** 민·관이 공동 투자하는 펀드, 국책은행의 선도적 벤처투자 역할 강화 등

⑤ **(기업중심 → 지역산업과 연계)** 그간 지역 주력산업과 무관히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추진

* 지역에 위치한 창업기업 육성, 지역 클러스터와 연계

⑥ **(물리 공간 → 가상 확장)** K-스타버스, 가상공간 창업제도 등 생태계 환경을 물리적 공간뿐만 아닌 **가상 공간**으로 확장

Ⅲ. 정책방향 및 핵심전략

비전

「**스타트업 코리아**」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

핵심
목표

- 글로벌 100대 유니콘 : (22) 1개 → (27) 5개
-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 : (22) ^{서울}10위 → (27) ^{서울}7위
- 벤처투자 규모 : (22) 12.5조원 → (27) 14.2조원
- 지역기반 기술창업 비율 : (22) 37.4% → (27) 40%
- 지주회사 CVC 신규투자액 : (22) 2,118억원 → (27) 5,000억원
-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 : (22) 6위 → (27) 3위

전략 1. 과감한 **글로벌 도전**^{아웃바운드}과 **글로벌 창업허브**^{인바운드} 조성

〈아웃바운드〉

- ① 쉬운 해외창업 및 해외에서 성장지원
- ② 글로벌 정책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

〈인바운드〉

- ③ 외국인 창·취업 지원
- ④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창업환경 조성

전략 2. 민·관의 **합동투자**와 **새로운 창업지원방식**의 도입

- ①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 ② 융복합형 창업지원 방식 도입
- ③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체계 마련

전략 3.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 ①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 ② 지역기반 경쟁력 갖춘 스타트업 양성
- ③ 지역기반 벤처투자 활성화

전략 4.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과 **규제개선**

- ① 스타트업-대기업간 개방형 혁신 촉진
- ② M&A 및 CVC 제도개선 등
- ③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 도입

전략 5.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 조성

- ① 도전적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
- ② 창업으로 연결되는 군복무 제도 및 대학·연구 환경
- ③ 재창업과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 구축

IV. 세부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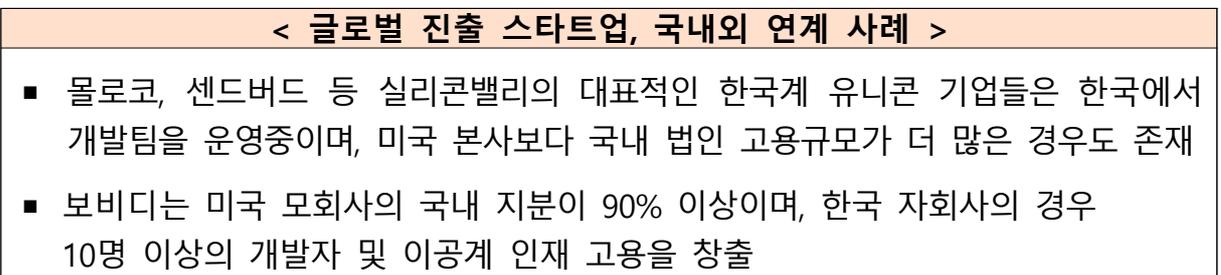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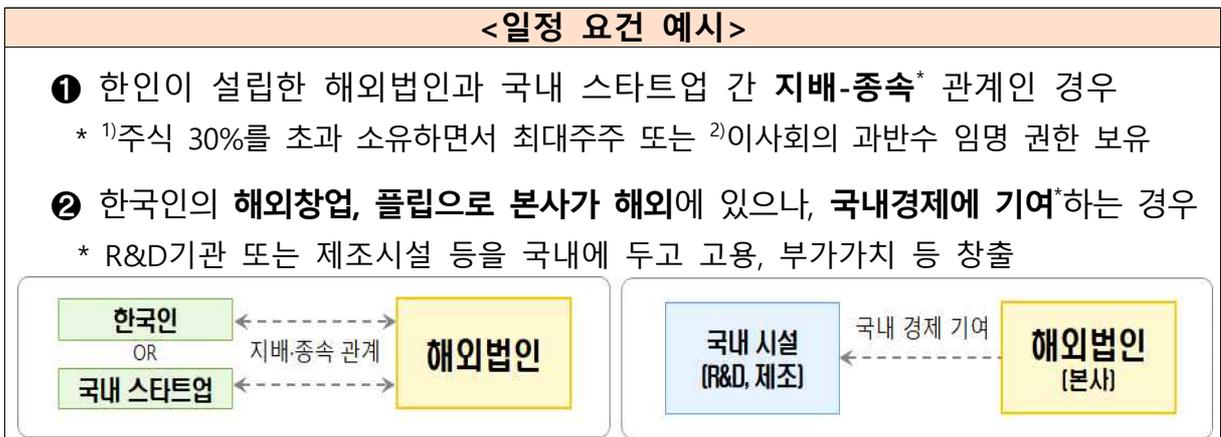
1 과감한 글로벌 도전^{아웃바운드}과 글로벌 창업허브^{인바운드} 조성

- ※ 아웃바운드(Out-Bound) :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 ※ 인바운드(In-Bound) : 해외 스타트업의 한국 창업생태계 안착 및 적응 지원 정책

1] 쉬운 해외창업 및 해외에서의 성장 지원^{아웃바운드}

□ 한국인 창업자의 해외 창업과 성공적인 정착 지원

-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기여도·지배력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설정 (창업지원법령 개정)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법인이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국내 법인과 동등하게 심사·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검토



□ 해외 VC가 先투자·後지원하는 GLOBAL TIPS 신설

- (글로벌 팁스) 해외VC로부터 일정금액(예 : 20만불) 이상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트랙을 시범 운영 (신설, 20개)

- 해외 VC가 발굴·투자한 창업기업*에 해외진출자금 등을 매칭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투자 및 해외진출 유도

* 초격차 10대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에 시범 도입후, 향후 확대 추진

- 해외 VC 등의 글로벌 인큐베이팅, 한인 선배기업의 글로벌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타겟팅하도록 지원

□ 글로벌 펀드 확대 및 해외진출 전용펀드 신규 조성

- **(글로벌 펀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24년 10조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



*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로, 투자기업 중 11개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 현재 일부 지역에만 집중된 조성지역도 중동·유럽 등으로 다변화

- **(해외진출 전용펀드)**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을 설립(예정 포함)한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주요 출자분야)

< 해외진출 전용펀드(안) >
1)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을 설립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2)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3) 해외M&A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4) 국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한국인 출신 창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 등. 단, 이 경우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투자 가능

□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거점 강화

- **(기능 강화)** KVIC실리콘밸리 사무소와 연계*하여 해외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K-스타트업 센터**」를 추가 조성

* (현재) 벤처투자 기능에만 집중 → (개선) 창업지원, 네트워킹 기능 추가

** 민간의 투자인프라와 네트워킹 지원이 강화된 '베트남 하노이 KSC' 신규 개소('23.下)

□ 대륙별 특성에 맞는 스타트업 진출전략 수립 **민관협업**

- **(미국)** 한-미 클러스터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인 벤처 협·단체 활동이 활발한 북미지역 네트워크도 활용하는 등 특화된 지원 추진
* (韓) 바이오 랩허브 - (美) 보스턴 랩 센트럴간 협약('23.4)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중동)** 다양한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가간 공동펀드도 조성 추진
* (예시) 한국의 COMEUP과 사우디의 BIBAN간 파트너십을 맺고, 사우디 특별관 운영
- **(일본)** 재외공관 협업*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 형성을 지원하고, 한류 문화행사(KCON 등)과 연계하여 스타트업 제품을 홍보
* 공관은 벤처·창업 네트워킹 행사 개최, 양국간 정책 교류,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안내
- **(프랑스)** 다쏘시스템 등과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을 강화*하면서, MOU**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의도 추진
*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바이오텍 이노베이션 센터(가칭) 설치('24.上) 등
** 로레알(디지털·뷰티 테크 분야 협력 등), 제이씨데코(스타트업 지원육성 등)

②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 아웃바운드

□ 글로벌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Pool 구축 및 집중 지원

-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의 '창업 - 글로벌 진출'을 연계하는 집중 지원 트랙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률을 제고
- 기 지원받은 창업기업 中 해외 진출 가능성이 큰 기업 Pool*을 구축하여 후속 연계사업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
- * (예시) 초격차 1000+ 스타트업 선정 → 해외 전시회 우선 참가 지원



"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자리·고용 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 "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化 및 청년 글로벌 창업교육 추진

- **(글로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진공 직영 청창사(5개)를 단계적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전환 검토
 - **(후속 지원)** 글로벌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졸업생 대상으로 2년차 후속 지원* 검토
 - * 해외 진출 자금 지원, 현지 진출 매칭(미국 트레이퍼대학, 현지AC 코칭 등)
 - **(글로벌 창업팀)** '외국인-내국인' 간의 창업팀(Team) 결성을 촉진하는 인재 매칭*, 해외진출 BM 수립 등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
 - * (예) 외국 청년 대상 창업보육 프로그램 신설·운영

현장의 목소리 " 해외 진출 국가의 국적 보유자와 함께 창업하는 것이, 정착에 유리"

- **(청년 글로벌 창업교육)** 주한 해외대사관*과 협업하여 (예비)창업기업에 대한 글로벌 창업교육, 현장학습 등 기획 운영
 - *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서울 영사관 內) 및 핀란드 Business Finland 등 연계

□ 기업의 해외정보를 망라한 「스타트업 통합DB」 구축

- 부처별로 산재한 기업해외DB를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PMS)에 활용하는 '스타트업 통합DB' 구축
 - 중장기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스타트업 해외진출 및 국내 유입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에 활용



※ 「창업지원법」상 DB 활용 근거 마련(24.上)

□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및 'K-스타트업'의 글로벌 브랜드화

-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권역별 해외전시회 참여*를 확대**하여 창업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기회 확대 지원

* VIVATECH 2023 (6월, 프랑스), SWITCH 2023 (10월, 싱가포르), CES 2024 (24.1월, 미국) 등
↳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한국 스타트업의 참여기회 및 홍보효과 극대화

** ('23) 3개 → ('24) SLUSH(핀란드) 등 추가 확대

- 'K-Startup 통합관*'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여 'K-스타트업'의 브랜딩 효과 제고

* (CES 2023) 중기부, 서울시 참여 → (CES 2024)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참여 확대

□ 스타트업 업종·분야별 전문화된 해외진출 촉진

○ **(분야별 수출지원)**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촉진

- **(콘텐츠)** 콘텐츠 기업의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콘」 개최를 통한 국내·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 (문체부)

* 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외 거점(비즈니스센터) 강화하는 방안 추진

- **(데이터)**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촉진하는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현지 거점을 통해 지원 (과기정통부)

- **(에듀테크)**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글로벌 박람회로 육성하고, 교육 ODA와 연계한 에듀테크 해외 진출 지원 강화 (교육부)

- **(푸드테크)** 푸드테크 집중 투자 펀드 조성 및 범부처 민관 합동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업체 애로사항을 신속 해소 (농식품부)

- **(해양신산업)** 해양 모빌리티, 블루푸드, 해양 에너지 기반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을 위한 「해양수산모태펀드」 조성 (해수부)

- **(지식재산)** 유망 IP스타트업의 신속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민간창업 투자기관과 협업하여 해외진출 IP창업패키지* 지원 (특허청)

* ('24) 유망IP스타트업 공동 선발 → 민간투자기관(초기투자+스타트업 CIPO) + 특허청(글로벌 IP출원/도입, 제품사업화 전략, 제작 검증) 협력 지원

- **(프롭테크)**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 판로를 위한 현지 실증 등 판로 개척 적극 지원 (국토부)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범부처 협업 기반의 분야별 해외진출 지원
 - * '23년 특화분야 : 스포츠(문체부), 스마트시티 및 물류(국토부), 푸드.에그테크(농식품부) 등
 - 해외진출 전략 및 해외 파트너사 공유, 진출기업간의 노하우 상호 전수 등 부처협업으로 해외진출 효과 극대화
- **(공공구매 연계)** 공공기관의 先 실증 後 해외 판로 지원
 - 조달청에서 혁신제품을 시범적으로 구매, 해외 공공기관이 시범 사용하여 실증사례*를 형성, 해외 판로개척 지원
 - *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조달청)와 ESG+(코트라)를 융합, 우수 벤처스타트업 제품의 해외진출 촉진(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사회공헌(업체당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해외 교두보 마련

3 외국인의 창·취업 지원 인바운드

※ UAE의 HUB 71, 영국의 GEP과 같이
 우수 해외 인재를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로 유입시키기 위한 제도를 기획

□ 스타트업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취업비자제도 개선

- **(창업비자 취득)** 기술성·사업성 등이 우수한 사업모델 보유한 외국인에게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 지원 검토 (세부 기준 마련)
- **(창업비자 연장)** 기술창업비자(D-8-4) 연장시 매출액 요건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고용·특허권·R&D 실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 (세부 기준 마련)
 - * 초기창업기업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 → 매출 발생에 애로
- **(창업준비비자 변경)** 창업 희망 유학생(D-2비자)가 창업준비 비자(D-10-2)로 쉽게 전환 할 수 있도록 비자변경 제도 활성화

※ 외국인 유학생 中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디어를 구상한 비중은 75.8% (STEPI, '17)

- **(학생비자 인턴)**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방학 중 창업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범위 확대*

* 현재는 제한적인 경제활동만 가능 (과학기술분야 학생연구원, 아르바이트 등)

- **(취업비자 취득)**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요건 완화* 추진 (E-7 비자)

* 도입업종(안)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법무장관이 정하는 분야, 중기장관이 추천 / (예시) 학사+1년이상 경력 → 학사 졸업자

※ 취업비자 취득자에 대해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방안 검토

참 고

외국인 대상 주요 비자

1 외국인 유학생 비자

체류자격 (기호)		체류기간	체류자격 해당자 또는 활동범위
유학생	유 학 (D-2)	2년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구 직 (D-10)	6개월	전문인력(E-1~E-7)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2 외국인 취업비자

체류자격 (기호)		체류기간	체류자격 해당자 또는 활동범위
전문인력	연구 (E-3)	5년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개발에 종사
	기술지도 (E-4)	5년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 기술 제공
	전문직업 (E-5)	5년	항공기 조종사, 의사, 선박 등 항공, 의료, 운수분야 등에 종사
	특정활동 (E-7)	3년	공·사 기관과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에 종사
비전문인력	계절근로 (E-8)	5개월	농작물 재배·수확 등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종사
	비전문취업 (E-9)	3년	제조, 농축산, 어업, 건설, 일부 서비스업 등에 종사
기타	기업투자 (D-8)	2-5년	외국인 투자기업 주재활동(5년), 벤처기업 설립(2년), 창업(2년)
	거주 (F-2)	5년	국민·영주(F-5)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 고액투자자, 전문인력·비전문인력으로 일정기간 이상 체류자 등(취업활동에 제한 없음)

□ 해외 혁신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한국형 GEP 도입

- (K-스카우터) 국내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K-스카우터 프로젝트」 도입 ('24~, 4개팀)

※ GEP(Global Entrepreneur Program) :

역량을 보유한 해외 창업기업의 영국 본사 이전 등을 지원하는 제도,
기업 유치 전략가인 딜메이커를 통해 비자·멘토링·네트워킹 등 종합 지원

- 해외기업 발굴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K-스카우터」를 구성,
미래전략산업·한국 안착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업 발굴·지원*

* 기술이전, 네트워킹, 투자유치, 세제혜택 등 종합 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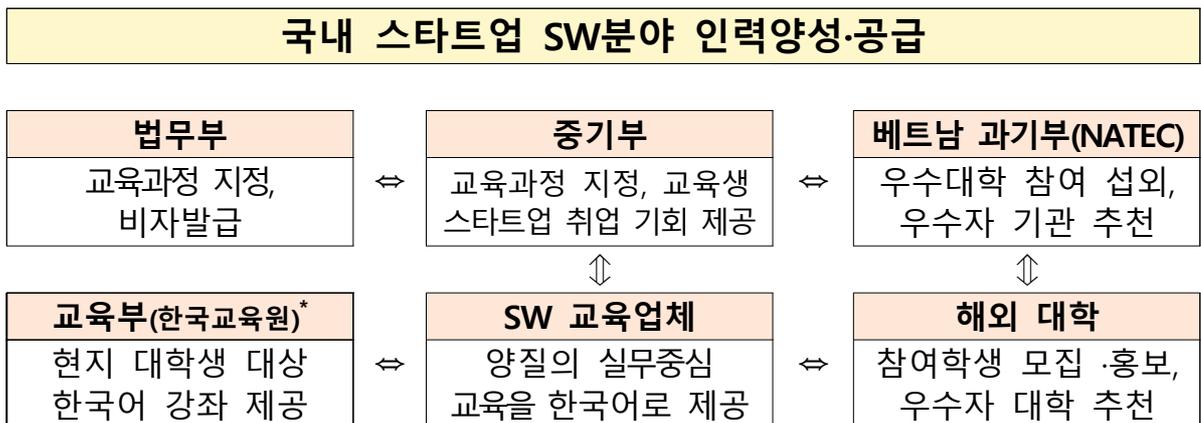
※ 발굴기업 수요에 따라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 사업 연계

□ 개도국 대학에 국내 수요와 연결한 한국어 기술강좌 제공

- (K-Tech College) 개도국*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SW분야 교육과정을 제공 후, 국내 스타트업으로 취업 연계 추진

* 우수 인력의 분포, 불법체류율 등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법무부·중기부)

< 추진체계(안) > ※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과제('23-'27) 반영 예정



* 대학 모집 현황·수요에 따라 한국어 교육 연계 제공 검토 (한국교육원 추가 협의 추진)

※ 기대효과 : (한국 이미지) 한류 붐 확산, (한국 창업생태계) 개방성 및 다양성 제고,
(한국 스타트업) 부족한 SW 인력 확보 (현지 졸업생) 한국 취업기회

※ 참고 : 중소기업 75.4%가 SW 전문인력 채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며,
향후 외국인 SW 인력 채용 의사를 피력한 기업은 54.5%(23.7, 중기부 조사)

□ 외국인·유학생 창업가의 국내 사업화 지원 및 네트워킹 강화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외국인 창업경진대회 중심에서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안착·성장에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

< K-그랜드 챌린지 개편 방향 >

개요	AS - IS	TO - BE
목적	한국 창업생태계 홍보 및 유입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안착 및 지속적인 성장
대상	(예비) 외국인 창업가	법인 설립(또는 예정) 외국인 창업가
성장지원	없음	사업화자금 지원, 국내 기업과 연계한 PoC, TIPS 연계 등

- **(도전 K-스타트업)** 現 학생리그에 유학생 트랙을 별도 운영하여 유학생들의 창업 등용문 확대

□ 외국인의 국내 창업지원 종합센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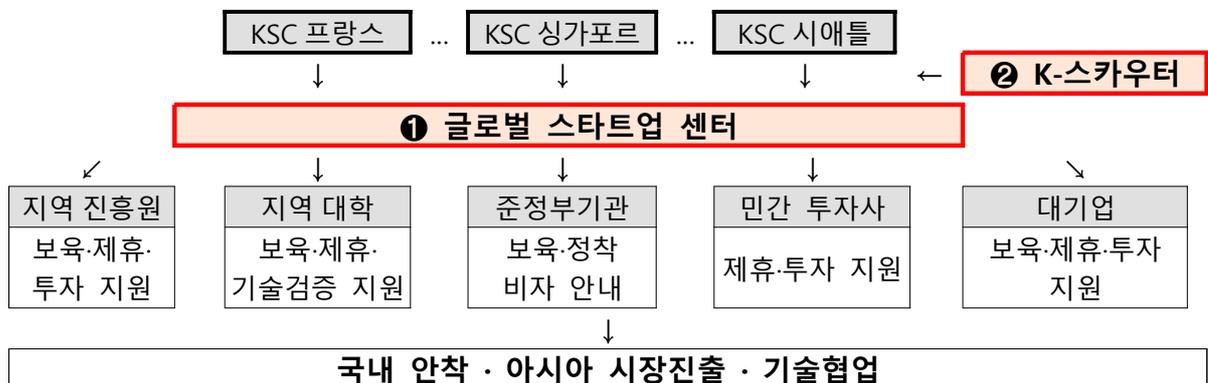
-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해외거점·대학·대기업·투자자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인바운드 창·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센터 신설

* 법률·회계·특허·행정 컨설팅, 활동을 위한 통번역·사무공간 등 지원 및 액셀러레이팅, 실증지원 등 사업화 등 종합 지원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OASIS* 등을 통해 기술창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연속적인 창업 활동을 후속 지원

*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 중기부·법무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운영하는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취득지원 프로그램

<인바운드 창업지원간 연계체계> (예시)



4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창업 및 지원환경 조성^{인바운드}

[대통령님 말씀]



“ 자유로운 체제와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국적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도 그들이 어디에서든지 혁신을 추구하고,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제공하고 하드웨어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국가가 창업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 '23.6.20, 한-프 미래 혁신세대와의 대화

□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 「스페이스 K」 구축 (수도권) **민관협업**

- **(구축방향)** 글로벌기업과 스타트업, VC 등 혁신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허브 조성

< 스페이스 K 기본방향 >

- **(민간중심)** 민간이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정부는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지원
- **(세계지향)** 글로벌기업, 해외기관 등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에 전세계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 **(프로그램)** 글로벌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자, 유명인사 등이 자유롭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창업지원·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조성전략)** 해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성공요인 벤치마킹

- **(민간주도)** 후보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전과정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공공이 세부적인 추진동력 확보 및 뒷받침**

* (민간) 대기업, 스타트업, 코스포, VC협회, 민간 창업지원기관 등

(공공) 중기부 및 관련부처, 지자체, LH공사,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국비 및 지자체 대응자금, 민자대응 참여유도 등

- **(참여확대)** 국내외 글로벌기업, 스타트업, VC, 대학, 스타트업 지원 기관 등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 사전섭외 및 전략적 유치

- **(추진일정(안))** 민관합동 TF구성 및 조성 기본방향 확정(~'23년말)
→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추진 및 건축설계('24년) → 구축('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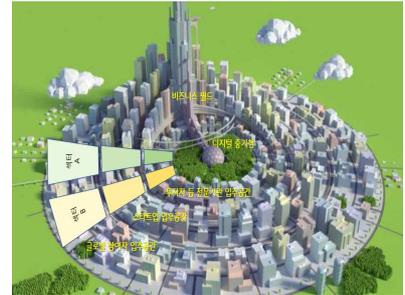
□ 네트워크상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 시범 추진*

* (추진 계획) 기존 민간플랫폼 활용 시범 운영 (~'24)

○ 전 세계 스타트업이 물리적 공간 제약 없이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국내·외 스타트업·투자자·지원기관* 등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 주체들이 그대로 참여하여 현실 생태계를 대체·보완

* KSV를 운영·관리하고, 기업에 맞춤형 창업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중기청 포함



-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접근성 및 글로벌 생태계와의 연결성 강화

□ 가상공간에서 외국인이 국내 창업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

○ 인바운드 창업의 마중물로써, 물리적 장소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해외 스타트업이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업체 설립, 공공서비스 비대면 제공(계좌 개설 및 세금 납부 등)

2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및 새로운 창업지원방식의 도입

1 벤처투자의 민간전환 촉진

□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민관협업**

○ **(조성)** 4년간('24~'27년) 총 2조원 이상

- 금융권, 성공 벤처기업, 대기업, 연기금·공제회 등 다양한 민간 경제 주체들과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출자

※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검토



- **(출자분야)**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 3대 핵심 투자 분야로 구분하여 자펀드 조성

3대 핵심 분야	출자 대상 자펀드
초격차	◆ 시스템 반도체, AI 등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목적 자펀드
세컨더리	◆ 구주 일반세컨더리, 펀드 LP지분 유동화 및 M&A 투자 목적 자펀드
K-글로벌	◆ 해외 Flip 기업, 해외진출 목적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자펀드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구조도 >



※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출자자가 함께 투자지원 역량 집중**

□ 안정적 벤처투자를 위한 정부 모태펀드도 확충

- **(모태펀드)** 매년 적정 수준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활발한 민간 자금 유입 유도 → 연평균 8조원* 벤처펀드 생태계 조성 노력

* 연평균 벤처펀드 규모 : ('18~'22) 6조 832억원 → ('23^E~'27^F) 8조원 이상



“경기둔화로 인해 법인, 금융기관 등 출자자 모집이 너무 어려운 상황, 민간 출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모태펀드 확대가 어느때보다도 필요”

-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지역투자 등 정책목적 펀드 조성

<'23-'27년 모태펀드 집중 조성 주요 분야>

집중 조성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창업기업 성장지원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 단계부터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은 혁신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
지역혁신 벤처투자	지역균형 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 모펀드 권역의 지역혁신 기업, 규제샌드박스 내 유망산업 분야 기업 등에 투자
청년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50%가 만39세 이하인 청년기업 등에 투자
	여성기업

□ **국책은행·시중 금융기관의 선도적 벤처투자 역할 강화** 민관협업

- **(제도 개선)** 벤처펀드에 대한 금융지주그룹의 적극적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출자한도 상향 및 민간 모펀드 세액공제 신설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은행의 대주주 발행 비상장 지분증권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現 0.5%)로 상향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3.7.5.)
 - 수익성, 안전성이 높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산업은행 출자)** 정부(0.3조원), 민간(2.1조원), 산업은행(0.6조원) 매칭을 통한 혁신성장펀드(분야 : 혁신산업, 성장지원) 3조원 조성 ('23.4~)
 - 혁신산업(신산업 육성 투자, 1.5조원), 성장지원(성장 중·후기단계 투자, 1.5조원) 분야 자펀드 조성단계에서 산업은행이 각 0.3조원씩 출자

<참고 : 혁신산업펀드 및 성장지원펀드 투자 분야>

분 야		투자대상 분야
혁신 산업*	신성장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기술) 미래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과학기술, 미래의료, 에너지신기술 ■ (新일상) 내삶속의디지털, 차세대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농어업 ■ (新시장) 전략산업No1, 바이오혁신, K-컬처융합관광, 한국판디즈니, 빅딜수주
	초격차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원전
	미래 유망산업	■ 바이오헬스, 나노소재, 수소생태계, ICT신산업, 미디어/컨텐츠, 해양수산/국토교통/농식품 신산업, 항공우주, 탄소소재, 방산, 양자
성장 지원	■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성장단계 중소·중견기업	
	■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e) 50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혁신산업' 분야 상세 분류는 「신성장 4.0전략 추진계획('22.12.19, 기재부)」,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22.12.26, 금융위)」 참조

□ **글로벌 유니콘 육성을 위한 예비유니콘 금융지원 강화**

- **(보증한도 확대)** 글로벌 진출을 통한 빠른 성장지원을 위해 기술력 우수 예비유니콘에 대한 보증지원 산정한도를 30% 확대*
 - * (현행 산정한도) 1회전 운전자금 이내 → (개선) 1회전 운전자금×130% (30% 추가 지원) (목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500억원 이상 공급

2 융복합 창업지원방식의 도입

※ 정부재정의 추가부담 없이 기업당 지원규모를 확대하면서도 혁신성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

□ 창업사업 지원방식을 동기부여형으로 개편 (창업지원법령 개정)

현장의
특소리

- 기업당 지원규모가 적고,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미 지원을 받아 지원받기가 어려움
- 그러나, 정부 지원사업의 예산은 증가하기 어렵고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원규모가 변하지 않고 있음

○ 창업사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 (성공불 방식 도입) 현행 창업지원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되, 추가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매출 발생시 회수*

* (예시) ^{현행} 보조금 1억원 → ^{개선} 30% 추가 지급(1.3억원), 30%에 해당하는 3천만원은 매출 발생시 정부가 다년에 걸쳐 회수

※ 이스라엘은 성공시 매년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상환받는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정부지원금의 전액을 상환할때까지 로열티 지불

- (보조+투자) 기업가치를 산정하지 않는 SAFE 방식의 투자를 병행, 추후 후속투자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창업자에게 콜옵션 부여*

* (예시) (현행) 보조금 1억원 → (개선) 보조 1억원 + 투자 1억원
- 기업이 상승된 가치로 후속투자를 받을 경우 정부는 1억원 이상을 회수
- 기업 여건에 따라 정부가 갖고 있는 1억원의 지분에 대해 창업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지분 취득 가능 (정부는 적정 시장가격에 매각)

- (보조+융자) 1회 심사로 보조금과 융자를 동시에 지원하고, 융자는 창업기반자금 운용방식을 준용하여 원리금 회수*

* (예시) (현행) 보조금 1억원 → (개선) 보조 1억원 + 융자 1억원 패키지 지원

- 창업자는 ①보조.출연(이하 보조 등), ②성공불, ③보조 등+투자, ④보조 등 + 융자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공모 지원
- '24년은 매출발생과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창업도약패키지」부터 ②~④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기업의 만족도·성과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

3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마련

※ 「기업가형 소상공인」: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제조기반, 서비스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활혁신형 소상공인

□ 소상공인 투자모델 창출

- **(사업권 투자) 수익 창출용 자산** (부동산·제품·서비스 등)에 투자*하고, 창출된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 (「소상공인법」 개정)

* 개인·법인사업자의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

** 지분전환계약 제도와 병행 운영



- **(매칭 용자) 민간투자사가 유망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先투자하는 경우 최대 5배** 까지 정책자금을 연계하여 지원



- **(지분전환계약) 개인사업자 사업권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법인전환시 지분 전환*하는 제도 도입 (「소상공인법」 개정)

* 소상공인의 대다수가 非법인 개인사업자로 주식·출자 등의 투자방식 불가

- 법인전환시 지분발행 대신 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옵션 (사업권 투자 선택) 부여

현장의 목소리

홍삼진액 제조·판매권 등의 수익배분에 관한 투자계약 체결, 추후 매출·수익 확대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지분을 배분(H사 사례)

- **(로컬상권 조성)** ①상권기획자-②발전기금-③상권관리기구가 유기적 연계하여 상권을 상호 발전시키는 「민간 주도 투자제도」 기획

①상권기획자	②상권발전기금	③민관협력형 상권관리기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보육·육성하고, 골목상권 기획·운영 등 상권발전방안을 전문 기획하는 자	상권 주체자들이 상권발전 재원조달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성한 기금	지역구성원이 상권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조직

3

지역창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① 지역창업의 혁신을 위한 기반,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 「스타트업 클러스터」 : 창업자, 대학, 앵커기업 및 지원기관 등 다양한 혁신주체의 물리적 집적을 통해 지역 내 창업 역량을 결집,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창업생태계

□ **(하드웨어 조성전략)** 창업기반시설 집중 구축 및 창업유관기관 이전을 통해 도심 내 핵심권역을 스타트업에 특화된 클러스터로 재구성

① **(지원내용)** 지방 스페이스-K를 중심으로 창업인프라를 집적하고 관련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각종 특례 지원

○ **(지방 스페이스-K)** 지방에 청년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문화·소통·주거가 결합된 청년창업 복합공간* 구축

* 창업기반시설과 함께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 및 편의·문화시설, 복합 생활시설 조성을 위한 부처협업 추진 (행안부, 국토부 등)

○ **(^{가칭}K-창업캠퍼스)** 지역 내 산발적으로 위치한 스타트업 혁신기관 및 유관기관을 스타트업 클러스터 내로 집적 (시범 도입)

※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지원사업 선정 시 스타트업 클러스터 지역을 우대

창업보육센터(BI)	메이커 스페이스
중장년센터	1인창조센터
창업기획자(AC)	VC 등



(가칭) K-창업캠퍼스

* BI, 중장년센터, 1인창조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VC 등 집적, 협업 및 혁신

② **(추진방향)** 지자체의 각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제도·정책적 지원

○ **(선정)** 혁신 주체(대학, 대·중견기업, 연구소 등) 밀집 정도, 지역기업 활동 기반 및 지자체의 향후 계획 등을 종합 고려

< 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 시 필요 요건(안) >

· 도심 접근성이 높고, 청년 유입시 활력 제고 효과가 큰 곳		· 대중교통, 임대주택 등 정주여건 확보	
· 기존 인프라 연계	· 도심 내 기존 창업인프라	· 기관 유치 계획	· 연구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
	· 지역 내 기존 클러스터		· 대·중견기업 및 선도벤처기업
	· 클러스터 구축·운영 전담기관 설립		· 투자사 등 금융서비스 기관

- (절차) 기본방향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자체 공모
- (역할) 지자체는 부지·건물 확보, 혁신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고, 중앙은 각종 규제 완화, 혁신기관의 건립·이전, 정책수립 등 지원

< 클러스터 조성 주체별 역할(안) >

[제도·정책] 정부		[실행] 지자체		[지원] 공공기관	
제도	· 벤처집적지구, 규제자유 특구 등 제도·세제 혜택	입지	· 부지·건물 확보 · 용도 제한 해제	컨트롤 타워	·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 지역공동 행사 등 * 창진원, 창경센터 등
정책	· 앵커건물 신규 조성비 · 초격차 1000+ 스타트업 등 사업 연계	유치	· 저렴한 용지공급 및 혁신주체 유치		

□ (소프트웨어 조성전략) 클러스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민간 주도 거버넌스 구축 및 스타트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① (거버넌스) 각 지역의 혁신역량과 자원 제약을 고려,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집행 체계를 구축하여 조기 활성화

○ (전담기관 신설) 클러스터 활성화를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추진할 민간 주도의 기관 설립 추진

○ (공동 프로그램) 민간을 포함한 클러스터 내 지역 창업생태계* 전체가 협력하는 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민간) 창조경제혁신센터(주관), 창업중심대학 등 대학, BI, 지역 VC, TP 등
(공공)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지자체 등 참여

② (보육인력) 창업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창업보육 우수인력 양성

- 現 ‘창업보육전문매니저’*를 국가 공인 자격으로 제도화하고, 2등급제**로 체계화

* 창업보육협회 운영 민간등록자격으로, 약 6,800여명(23.6월 기준) 취득하여 멘토링, 투자연계, 지식재산권 취득 등 보육서비스 제공 중

** 단일등급제 → 2급 자격증(기본) / 1급 자격증(2급 취득 후 일정 경력, 역량 인정시)

- 스타트업 보육 전문인력의 DB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예) 인력별 전문분야, 경력, 스타트업 육성실적 등을 DB화하여 수요기관과 매칭

② 지역기반의 경쟁력 갖춘 스타트업 양성

- (초격차 스타트업 안착)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된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시 지역 R&D·사업화, 인프라 등 우선 지원*

* (R&D·사업화) 별도 트랙 또는 가점 부여 + 투·융자 및 장비시설·인력양성 연계 (인프라) 지역 창업보육센터, TP,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공간에 우선 입주 등

< 참고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정의)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 시장수요에 부합하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10대 초격차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23년부터 1,000개 육성)

(분야) ① 시스템반도체 ② 바이오·헬스 ③ 미래 모빌리티 ④ 친환경·에너지 ⑤ 로봇 ⑥ 빅데이터·AI ⑦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⑧ 우주항공해양 ⑨ 차세대원전 ⑩ 양자기술

(지원) 기술사업화(3년간 최대 6억 + 2년간 최대 10억원), R&D(2년간 최대 5억원) + 기타 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

- (인프라 연결) 지역 소재 스타트업과 산업별 특화 인프라 연계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내 민간·공공 창업기획자(AC)가 발굴한 스타트업이 특화 인프라 입주 신청 시 우대

- 지역별 인프라에서 보유한 시설·장비 등을 지역 소재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별 장비 정보 공유·사용법 교육 등 지원

< 산업별 스타트업 특화 지원 인프라 예시 >

- (그린바이오)** 공간·장비·창업프로그램 등을 종합 제공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유망 벤처·스타트업 육성 (농식품부)
- (스마트농업)**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청년농이 스마트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 또는 매도 (농식품부)
* 경지정리, 관정, 용·배수로, 전기인입 등을 스마트팜이 가능토록 정비
- (콘텐츠)** 지역기반 콘텐츠 창작·창업시설*을 통해 지역창업 활성화 (문체부)
* 예) 지역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역콘텐츠코리아랩 등

□ **(지역주력산업 연계)** 지역주력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내 초격차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 혁신바우처 등 우대

* 14개 비수도권 지역 대상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및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여부 등을 고려하여 **60개 선정**



③ 지역기반 벤처투자 활성화

□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및 지역 엔젤투자허브 조성

○ **(재간접펀드)**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회수재원(약 200억원)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지원 목적의 전용 펀드 조성

* **(개념)**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엔젤투자금액의 1~2.5배 규모로 매칭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11~15 조성)

- 펀드 출자금 총액의 100%를, 전문개인투자자·창업기획자 등 엔젤투자자가 지역기업* 투자 목적으로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재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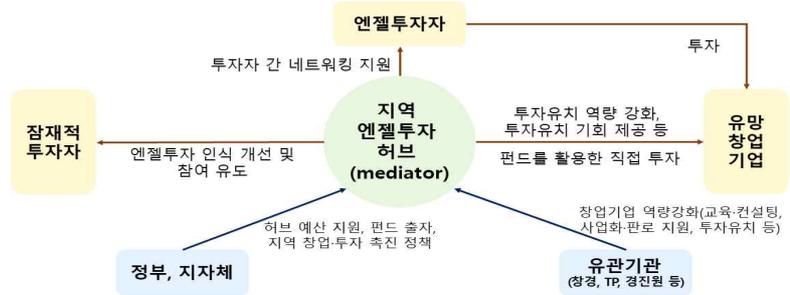
* (대상) 비수도권 지역에 본점이 있는 기업으로서 ▲초기창업기업,

▲소규모(연평균 매출액 30억원 미만)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로컬크리에이터 등

- **(지역 엔젤투자허브)** 수도권-비수도권간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 확대*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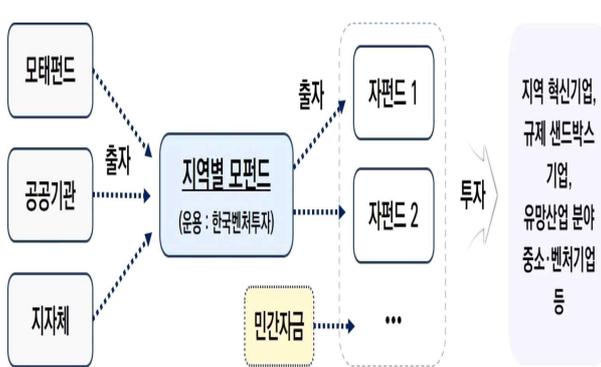
* ('21년) 충청권, 호남권 2개소 구축 → ('23년) 동남권에 1개소 추가 구축
→ (~'27년) 5개소 조성 목표

-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등 지역투자 활성화

- **(지역혁신 벤처펀드)** 지자체·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26년까지 1조원 조성, 지역 혁신기업에 투자 확대



지자체	부산	150억원 (21~23)	1,395억원
	충청권	153억원 (21~23)	1,350억원
	경남권	120억원 (21~23)	1,200억원
	대구·제주, 광주	198억원 (22~24)	1,278억원
	전북·강원	135억원 (22~24)	870억원
계		756억원 (21~24)	6,093억원

<자펀드 출자·조성계획 ('21~'24)>

□ 정책금융기관의 비수도권 대상 투자 확대

- **(보증연계투자)** 매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금액중 5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할당하여 지방투자 촉진

< 보증연계투자의 기능 >

- **(초기기업 투자촉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을 선별,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시장 내 신호기능을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 보행
- **(지역 균형투자)**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 등 상황에서 지역거점 투자전담 조직을 활용,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로 지역균형 투자 촉진

① 스타트업-대기업간 개방형 혁신 촉진

□ 대기업과 우수 스타트업간 탐색하는 오픈플랫폼 구축 **민관협업**

※ **이노센티브**(Innocentive) 개념 도입 : innovation과 incentive의 합성어로, 외부로부터 R&D 등의 **자원이 필요한 기업** ↔ 이를 공급하는 기업을 연결하고, 연결시 공급자 또는 중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념

-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협업을 원하는 우수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들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수요(needs)에 부합하는 기업을 쌍방향 검색
 - 플랫폼 내 AI 분석을 통해 협업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고, 정부는 실증*, 시제품, 최소요건제품** 제작 등을 지원

* (PoC) Proof of Concept ** (MVP) Minimum Viable Product

□ 대-스타트업 상생프로그램을 신산업 분야로 확산 **민관협업**

- **(상생 프로그램)** 「팹리스 챌린지*」와 같은 반도체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을 AI·미래모빌리티 등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 추진

*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파운드리 공정 이용과 설계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특정 분야 → 신산업 전체, 협력 방식 다양화 추진(기업간 협업 과제 수행 등)

□ 민간 역량을 활용한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촉진 **민관협업**

- **(민간의 선별기능 활용)** 민간 창업경진대회*에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 추천권을 부여하고, 중기부 사업에서 별도 평가 없이 우선 선정**

* 대회 신청자 수, 엑셀러레이팅 등 지원프로그램 및 사업화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추천권을 부여할 대기업 등 민간 창업경진대회를 사전에 선발

** 추천받은 기업이 동일 단계의 창업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다음 단계 선정 우대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신산업 분야에 강점 있는 대기업이 개발·사업화,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협업 프로그램* 운영·확대

* 정부는 협업 대기업을 지속 확대('23. 7개 → '24. 10개)하고, 대기업과 공동 선정한 스타트업에 사업화자금(최대 3억원) 지원으로 뒷받침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 대기업 현황('23년) >

KT	KB금융	CJ네트웍스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삼성중공업	교보
						
5G응용 (AI·모빌리티)	핀테크·프롭테크	디지털 서비스	저탄소·배터리 업사이클	탄소중립·모빌리티	로봇·자동화 생산시스템	인슈어테크 문화콘텐츠

- **(K-클라우드 프로젝트)** 창업기업 등이 개발한 AI 반도체를 대기업의 클라우드 센터에 실증, 레퍼런스 확보 등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딥테크 동종·이종간 기술교류·네트워킹 및 BM 개발 지원

- **(동종)** 정부, 스타트업,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동향 공유, 강의 토론 등 포럼 개최
- **(이종)** 타 산업 내 신기술 및 BM 보유 수요기업과 시스템반도체 기업간 협업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예시) 신시장 창출을 위한 수요 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 시스템반도체 ↔ 타 기술 교류를 통한 협업(예시) >

시스템반도체	타 기술	협업 예시
시스템반도체 창업기업	↔ 바이오헬스	·랩온어칩 반도체 기업과 DNA 치료제 등 신약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공동 실증
	↔ 미래 모빌리티	·라이다 센서 반도체 기업과 자율주행 SW 기업 협업형 자율주행 통합 솔루션 개발
	↔ 친환경·에너지	·전력센서 반도체 기업과 에너지 효율화 기업간 협업을 통한 O&M 솔루션 개발
	↔ 로봇	·배송 로봇 기업과 자율주행 SW 개발 기업 협업을 통한 문 앞 배송하는 물류 로봇 개발

②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M&A 및 CVC 제도개선 등

※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중기부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금융위), 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기재부) 등 발표과제 차질없이 수행

□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위한 M&A 지원

- **(용자)** 시장형성이 부진한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신설 (0.3조원, 기은)

* 소규모 M&A(300억원 이하) 성립이 가능하도록 기업은행이 마중물 용자자금을 공급하여,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유입 유도

- **(투자)** 중소기업 M&A 전용펀드(기은, ‘23년중 0.1조원) 신설 및 혁신성장펀드 內 성장지원펀드(‘23년중 1.5조원 조성) 운영

※ M&A 체결에 필요한 모험자본 제공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 촉진

- **(자문·컨설팅)** 벤처·중소기업이 성장전략으로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산·기은)

- **(세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 확대 (‘24~)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인수시 해당 기술 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현행) 기술가치금액 =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의 130%
→ (개선) 기술가치금액 =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의 120%

□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M&A 지원 플랫폼 구축

- **(지원 플랫폼)**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종합 플랫폼 구축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개편, ~’23년말)

* Smart tech-Bridge :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거래 플랫폼으로서 기술의 수요와 공급 정보를 한데 모아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現 등록기술 92만건)

- AI를 활용한 M&A 매도·매수 기업 간 탐색(On-line) 및 자금 지원* 등

* 중소·중견기업(총 자산 5천억원 이하)의 M&A 소요자금을 건당 최대 200억원까지 보증

< M&A 지원 플랫폼(안) >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애로 해소 및 생태계 활성화

- **(CVC 규제 애로 해소)**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외부 출자 비율 및 해외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 (‘23)
 -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CVC 펀드 대상 외부 출자 규제 방안을 검토 (現 펀드별 40% 이내)
 - 국내 창업기업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해외법인(예 : 플립) 대상 규율 마련 등 해외투자 개선 검토 (現 CVC 총자산의 20% 이내)
- **(CVC 협의체)** 벤처캐피탈협회 내 CVC 분과협의체를 신설(‘23)하고, 공정위·중기부 등 정부부처와의 협력 및 제도개선 논의 창구 마련
-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 CVC 네트워크 행사인 “GCV 컨퍼런스* in Asia”를 컴업과 연계하여 한국 시범개최(‘23.11) → 향후 정례화 추진



 - * 영국 미디어 기업 GCV가 글로벌 CVC 네트워킹을 위해 1년에 6회 내외 진행하는 행사
- **(투자 협력 지원)** 창업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CVC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CVC 전용 매칭 투자 프로그램 신설 검토 (‘24)

□ 기술특례상장* 개선을 통한 벤처기업 회수시장 활성화

* 기술평가 및 성장성 추천을 통해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접근성 제고)** VC로부터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첨단 기술 기업*은 1개 기관의 평가**로 상장 가능한 “초격차 특례” 신설

*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50개 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4개 분야 17개 기술) 보유 기업

** 일반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2개의 평가기관의 기술평가가 요구

- **(대상 확대)** 매출액·자산 규모는 중소기업이나 최대 출자자가 중견 기업인 우수 첨단기술 기업도 기술특례상장 허용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매출 지속 증가 기업만 기술특례상장 가능

→ 중견기업이 지분 30% 이상 최대 출자자인 경우 중소기업 미해당, 특례상장 불가능

③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 도입

□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인 「글로벌 혁신특구」 본격 추진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발표 과제 본격 이행 (비수도권에 혁신특구 지정, '23.下)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혁신 클러스터 도입*

* 23.下에 2곳 이상의 특구 조성 → 이후 '27년까지 권역별 10개로 확대 추진

-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전면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허가까지 연계 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 등 글로벌 수준의 실증·인증 체계 구축

*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활용 실증을 모두 허용

- 미래모빌리티·첨단 바이오 등 국내 실증이 어려운 첨단 분야의 해외실증 거점*을 조성하여 제품개발 및 해외진출 촉진

* (美) UL Solutions MOU('23.4월), (日) 쇼난 iPARK, (佛) 코스메틱 벨리 MOU 체결 예정

□ 규제를 A부터 Z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순주기 지원체계 구축

- **(창업규제트리)** 스타트업의 분야별로 핵심규제 정보를 파악하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규제정보 진단 체계*를 기획 ('24~)

* 기업 중심의 법령 체계, 입법예고 및 규제 내용 전달 시스템 + 그림자 규제까지 대응

창업규제 혁신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① 규제진단 •자가진단* 실시 * 창업규제트리 활용 창업기업	② 규제발굴 •규제 해당기업 •사업 주관기관 •조사·발굴* * 연구용역/공공·민간 협업 발굴 창업기업·창진원	③ 규제개선 •법령·제도 검토 •개선방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개선안건 상정 (경제규제혁신TF 등 활용) 중기부·창진원	④ 규제장벽 해소 •규제 해당기업 멘토링/컨설팅 (BM 피봇팅 등) •프리규제샌드박스 운영 •투자유치/기존사업 연계지원 중기부·창진원	⑤ 사후관리 •추진경과 점검 /DB 최신화* * 창업규제트리 반영 •지원기업 성과 관리 창진원

□ 순방위적 규제애로 발굴·개선체계 조성

- **(규제 유예)** 초기창업기업 대상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한시적 적용유예를 검토하고, 유예기간 중 창업기업 대상 지원*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등 차등화 적용, 초기창업기업의 규제대응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기존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규제예보제)** 창업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규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예보제」 확대* 운영

* (기존) 규제비용 30억 이상인 규제 → (개선) 규제비용이 피규제대상 평균매출의 1% 이상

규제예보제 운영('23.下~)

- **대상선정** : 규제비용이 피규제대상 평균매출의 1% 이상인 규제
 ※ 신설·강화 규제 도입 시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선정
- **의견수렴·반영** : 신설·강화 규제 관련 정보 협·단체 홈페이지 게시 → 협·단체 기업에서 제출한 의견 분석 및 영향평가 보고서에 반영

① 도전적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

□ 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 **(인정과목 추진)** '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기업가정신」 관련 인정 도서를 개발 추진 (교육청 협의*)

* '25년 새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발명과 기업가정신」 등 고교 신규과목 편성 추진

- 중·장기적으로 교과목 활용도, 인정도서 보급률, 관련 과목 운영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 지원 방안 검토
- **(교육수준 제고)** 교육 전문가를 '27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하여 방과후 학교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 추진
-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연수에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을 개설

□ 대학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촉진

- **(인센티브 도입)** 대학이 대상인 창업 관련 사업의 기관 공모시,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의 운영여부·실적 등을 선정평가에 반영*

* 「창업중심대학」 등 중기부 관련 사업 대상으로 先 도입

<참고 :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 >

제도명	내 용
창업휴학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막기 위하여, 휴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제도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준비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창업현장실습	창업을 현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창업장학금	창업활동과 창업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창업휴직	교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원이 창업시 창업을 사유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② 창업으로 연결되는 군복무 제도 및 대학·연구 환경

□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사업화 연계

※ 참고 :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

- 1979년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으로, 이스라엘 군사력 강화 + **엘리트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핵심적인 역할 담당
- * 탈피오트 출신은 700여명에 불과하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

- **(대상 확대)** 국방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학사 트랙 외에 석사 트랙 신규 도입을 검토하고, **선발인원 확대*** 추진

* 관련된 국방부 「인사관리훈령」 개정 추진

< 과학기술전문사관 개편 방안 >

<기존> 과학기술전문사관 : 학사

학부생(대학교 2~3학년)을 선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복무

+

<신설> 과학기술전문사관 : 석사

석사 과정생(입학 예정자)을 선발하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근무

- **(창업교육 강화)** 과학기술사관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전역 후의 창업사업화 연계지원 제공 (「창업중심대학」 활용)

□ 군복무와 연계된 창업준비를 지원하여 전역 후의 창업 촉진

- **(사회복무요원)** 현역 군 장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제공하는 등 창업저변 확대
- **(전역장병 사업화 지원)** 전역 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역 장병의 사업화를 위한 **별도 트랙*** 마련 (「창업중심대학」 內)

* 우대대상 : 과학기술전문사관, 도전! K-스타트업 내 우수성적팀 등의 전역 장병 우대

□ 新기술 분야를 선점할 딥사이언스 창업 촉진

- **(연구자-경영자 협력 창업)** 고난도 과학기술이 필요한 新기술 분야의 기술혁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형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

* (연구자) 과학적 진보, 지식재산 창출 등 / (경영자) 사업모델, 창업, 투자유치 등

- **(연구자 창업 탐색 교육)** 이공계 청년 연구자 탐색 교육체계 개편 및 창업 교육-보육간 연속성 강화*
 - * (예시) 대학 내 既 존재하는 창업 이론 수업 활용, 박람회 등을 통한 해외 진출 다변화 등
- **(공정한 성과 보상)** 창업 과정에 기여한 연구자·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이해충돌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 (가칭)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 연구자 창업 시 이해충돌 사례, 이해충돌 방지 절차 등

□ 우수 인재들의 벤처기업 근무 기회 제공

- **(휴·겸직 활성화)** 교수·연구원들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벤처기업을 경험하고 분사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휴·겸직 제도 확대*
 - *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원, 국·공립 기관의 연구원 → **(개선)** 모든 대학 및 연구원 (에너지공과대, 전통문화대, 폴리텍대학, 농수산대학, 국립암대학 등 확대)
 - 활용 현황, 효과 및 사례 분석 후 쏠 공공부문으로 확대 검토

□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 보완

- **(성과조건부 주식)**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보상 제도 도입으로 인재 유인책 다양화
 -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

<스톡옵션 - 성과조건부 주식 비교 >

구분	스톡옵션	성과조건부 주식
구조	부여 시점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성과 달성 시 행사 가능	성과 달성 시 주식 무상지급으로 확정적 이익 보장(성과 미달시 환수 또는 미지급)
인재 유인	기업가치 급성장 단계 또는 주식 강세장에서 선호되나 그 외의 경우 효과 반감	초기 또는 안정적 성장단계 기업에 활용도 높으며, 주식 약세장에서도 효과 큼

- **(복수의결권 도입)** 지분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의결권 10주 한도 제한적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23~)
 - ※ 본회의 통과('23.4.27) → 시행령 개정 및 제도 본격 시행(~'23.11.17.)

- **(스톡옵션)**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도록 부여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시가평가 방법**을 개선 ('23.7, 시행령 개정)
 - * (종전) 교수·변호사 등 13가지 직업·자격증에만 한정
 - (개선)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보유자, 박사 이상 학위보유자 등
 - ** (종전) 기준일 전후 6개월간의 거래를 시가로 판단하나,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는 미래 6개월의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문제→ (개선) 부여일 전 6개월 거래가격만 활용
- **(벤처확인제도)**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에 맞춤형* 평가지표 도입
 - * (기존) 매출액, 이익 → (추가) 활성이용자·고객전환율(플랫폼), 임상 단계(바이오) 등

3 재창업과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 구축

□ 재도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지원대상)**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 지원 강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재창업자 중심으로 지원
- **(지원체계)** 기존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심리 치료 → 실패 분석 →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하는 추진체계 검토
- **(컨설팅)** 폐업예정기업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을 강화*하여 빠른 Exit 및 새로운 시작으로의 발판 마련
 - * 지원범위 확대(2개 분야 → 3개 분야) 등 개선 추진
- 재도전하는 기업 대상으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특허 확보 등 지식재산 제품화 컨설팅 추진 (특허청-중기부)
- **(자금)** 실패 기록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자금(융자) 지원 확대, 재도약 펀드 추가 조성 검토*
 - * 재창업자금(융자) : '23. 750 → '24. 1,000억원 / 모태펀드(출자) '23. 160 → '24. 300억원

V. 향후 추진일정

정책 과제	부처·기관	추진 시기
1. 과감한 글로벌 도전^{아웃바운드}과 글로벌 창업허브^{인바운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법인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중기부	‘24. 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 신설 	중기부	‘24. 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펀드 확대 및 해외진출 전용펀드 신설 	중기부	‘23. 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스타트업 해외 거점 강화(KVIC, KSC) 	중기부	‘23. 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별 특성에 맞는 스타트업 진출전략 수립 	중기부	‘23. 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가능성이 높은 Pool 구축 및 집중 지원 	중기부	‘23. 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글로벌 진출기능 강화 	중기부	‘23. 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 해외대사관과 함께 하는 글로벌 창업교육 	중기부	‘23. 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진출에 필요한 통합 DB 구축 	산업·중기부 관세청 등	‘24. 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해외 전시회 지원 다각화 및 K-스타트업의 브랜드 글로벌화 	중기부	‘23. 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데이터, 푸드테크 등 맞춤형 수출지원 	문체·해수·교육 농식품·과기정통 특허·국토	‘23. 下

정책 과제	부처·기관	추진 시기
· 부처 협업 맞춤형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추진	중기부 등	‘23. 下
· 창업기업 제품 대상 공공구매 연계지원	산업부, 조달청	‘24. 上
· 창업·취업비자제도 개선	법무부, 중기부	‘24. 上
· 한국형 GEP 도입(K-스카우터 프로젝트)	중기부	‘24. 上
· 개도국 대학에 한국어 기술강좌 개설 (K-Tech college)	법무·교육·중기부	‘24. 上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전폭 개편	중기부	‘24. 上
· 「도전! K-스타트업」 학생리구에 유학생 트랙 운용	교육부	‘23. 下
·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조성	중기부	‘24. 上
· 우수한 인재의 국내 유망기업으로의 채용	중기부	‘24. 上
·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 「스페이스-K」 구축 추진 (수도권)	중기부	‘24. 上
· 「K-스타버스」 시범 추진	중기부	‘23. 下
· 가상공간에서 외국인 국내 창업 제도 도입 검토	중기부	‘24. 上

정책 과제	부처·기관	추진 시기
-------	-------	-------

2.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및 새로운 창업지원방식 도입		
· 민·관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중기부	‘23. 下
· 모태펀드를 통한 안정적 마중물 공급	중기부	‘24. 上
· 시중 금융기관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유도 (출자규제 개선)	기재부, 금융위	‘23. 下
· 산업은행의 선도적 벤처투자 역할 강화	금융위	‘23. 下
· 예비유니콘 기업 대상 금융지원 강화	중기부	‘23. 下
· 창업사업 지원방식을 동기부여형으로 개편	중기부	‘24. 上
·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마련	중기부	‘23. 下

3.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 지역 청년창업을 위한 복합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를 비수도권에 조성 추진	중부, 자체등	‘24. 上
· 「K-창업캠퍼스」 시범 도입	중기부	‘24. 上
· 지역별 민관합동 공동 프로그램 추진,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관 설립 추진 등	중부, 자체등	‘23. 下
· 창업보육 우수인력 양성	중기부	‘24. 上

정책 과제	부처·기관	추진 시기
-------	-------	-------

· 초격차 스타트업의 지역 안착 지원	중기부, 지자체	‘24. 上
· 분야별로 특화된 지역산업 인프라와 연계	농식품부, 문체부, 중기부 등	‘23. 下
·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조성 및 지역 엔젤투자허브 확대	중기부	‘23. 下
·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중기부, 지자체	‘23. 下
· 정책금융기관의 비수도권 대상 보증연계투자 확대	중기부	‘23. 下

4.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개선		
·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중기부	‘23. 下
· 대-스타트업 상생 프로그램 확산	중기부	‘23. 下
· 민간 창업경진대회 선발기업 우대	중기부	‘24. 上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확대	중기부	‘24. 上
·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과기정통부	‘23. 下
· 동종/이종 업종간 기술교류 촉진	산업부, 중기부	‘23. 下

정책 과제	부처·기관	추진 시기
-------	-------	-------

· M&A 활성화 위한 지원제도 강화	기재부, 금융위	‘24. 上
· M&A 지원 플랫폼 구축(기보)	중기부	‘23. 下
· CVC 투자·규제 애로사항 해소	공정위	‘23. 下
· 글로벌 CVC간 국내·외 교류 활성화	공정위, 중기부	‘23. 下
·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금융위	‘23. 下
· 글로벌 혁신특구 본격 조성	중기부	‘23. 下
· 창업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창업규제트리 활용)	중기부	‘24. 上
· 초기 창업기업 대상 규제유예제도 도입	국조실, 중기부	‘23. 下
· 규제예보제 시범 도입	중기부	‘23. 下

5.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 조성		
· 고교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중기부, 교과위, 교육청	‘24. 下
· 대학 내 창업 친화적 제도 확산	교육부, 중기부	‘23. 下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추진 시기
-------	---------	-------

·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 친화형으로 개편	국방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24. 上
· 군 전역자 연계한 창업중심대학 활성화	국방부, 중기부	‘24. 上
· 사회복지무요원 대상 창업교육 제공	중기부, 병무청	‘24. 下
· 新기술분야 딥사이언스 창업 촉진	과기정통부	‘24. 上
· 우수 인재들의 벤처기업 근무 기회 제공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24. 上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중기부	‘24. 上
· 복수의결권 제도 본격 도입	중기부	‘23. 下
· 스톡옵션 제도의 활용성 강화	중기부	‘23. 下
· 벤처확인제도 개선	중기부	‘23. 下
· 재도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중기부, 특허청	‘23. 下